

인도·인권적 접근을 연계한
북한농촌개발협력 방안 연구
(개인과정)

2023년 6월

통일부

최용수

차례

| | |
|---|----|
| 1. 서론 | 1 |
| 2. 본론 | 3 |
| 2.1. 북한 농촌 실태 | 3 |
| 2.2. 북한의 농촌개발 정책 및 한계점 | 18 |
| 2.3. 농촌개발과 인도·인권적 연관성 | 27 |
| 2.3.1. 농촌개발 사례 및 모델 | 27 |
| 2.3.1.1. 한국의 새마을운동 사례 | 27 |
| 2.3.1.2. 오스트리아 농촌개발 사례 | 34 |
| 2.3.2. 농촌개발과 인도·인권적 요소 | 39 |
| 2.3.2.1.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인권의 연계성 | 39 |
| 2.3.2.2. 북한의 SDGs에 대한 입장 | 47 |
| 2.4. 인도·인권적 접근 연계 북한 농촌개발 방향 | 51 |
| 2.4.1. 개도국 농촌개발협력 범주 및 SDGs 연계 추진방향 | 52 |
| 2.4.2. 인도·인권적 관점에서 시급한 북한 농촌개발협력 추진방향 | 54 |
| 3. 결론 | 62 |
| 참고문헌 | 64 |
| 부록 | 69 |

국외교육 개요

1. 파견국가: 오스트리아
2. 교육기관명: 비엔나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유럽북한연구센터(ECNK)
3. 교육분야: 통일
4. 교육기간: 2022.12.30~2023.6.27

교육기관 개요

| | |
|----------------------|---|
| 교육기관 명칭 | 비엔나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유럽북한연구센터(ECNK: European Center for North Korean Studies) |
| 교육기관 성격 | 대학부설연구소 |
| 기관 소재지 | 오스트리아 비엔나(Spitalgasse 2, Hof2 Campus, 1090 Wien) |
| 홈페이지 | http://ecos.univie.ac.at/ https://ecnk.univie.ac.at/ |
| 설립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연구소는 동아시아 경제·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통찰 제시 - 유럽북한연구센터는 동아시아 산하에 북한에 대한 전문적 연구를 목적으로 '22년 하반기 설립 |
| 기관 소개 및 주요 기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연구소(소장 루디거 프랑크 교수)는 한국·북한·일본·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사회에 대한 심층 연구를 진행 ○ 동아시아연구소 산하 유럽북한연구센터(소장 루디거 프랑크 교수)는 북한 경제·사회에 대한 심층 연구, 학술대회 개최, 출판, 네트워크 구축 등 |
| 주요인사 인적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장: Prof. Dr. Rudiger Fran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연구소 소장 및 유럽북한연구센터 소장 겸임, 북한·한국에서 풍부한 유학·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출판·언론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세계적 권위의 북한 전문가 * 동독 출생, '91년 북한 김일성종합대에서 6개월 유학, 이후 30년 이상 매년 북한 방문·연구, 한국학 석사, 경제·국제관계학 박사, 독일어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50인에 선정 ○ 부소장: Dr. Steven Denne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연구소 부소장 및 유럽북한연구센터 부소장 겸임, 동아시아 및 한국, 북한 연구 전문가 * 미국 하딩대 학사, 연세대 국제관계·정치학 석사, 캐나다 토론토대 정치학 박사 |
| 연락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장) Prof. Dr. Rudiger Fran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43-1-4277-43871 (e-메일) ruediger.frank@univie.ac.at ○ (부소장) Dr. Steven Denne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43-1-4277-43872 (e-메일) steven.denney@univie.ac.at |

1. 서론

오랜기간 지속된 만성적인 경제난·식량난과 2017년부터 본격화된 대북제재와 최근의 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 반복되는 자연재해가 겹쳐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은 더욱 열악해졌다. 여러 국제기구들과 단체들은 각종 보고서들을 통해 한결같이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상황 개선이 시급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국제사회 보고서[UNICEF, 2021][ACAPS] 등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절반 내외가 식량부족을 겪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기대수명은 남한 보다는 약 10살이 낮으며 성인 사망률은 남한 보다는 약 2배 높다. 특히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여성, 어린이의 인도적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모성 사망비는 남한의 7.5배이며, 5세 미만 사망률은 남한의 5.7배, 영아 사망률은 4배, 신생아 사망률은 남한의 9배, 5세 미만 저체중은 남한의 13.3배, 5세 미만 만성영양실조는 남한의 9배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 농촌으로 가면 더욱 심각해진다. 북한의 산업도시 중심의 경제성장이 도시와 농촌간 큰 격차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북한 농촌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다. 농촌 아동과 여성의 저체중(영양부족 상태) 비율이 도시의 두배에 달하며, 농촌 산모사망율도 도시의 두배에 달한다. 북한 농촌 아동의 영양 상태가 동북아 지역의 인근 저개발 국가인 몽골 보다는 3배 이상, 중국 보다는 6배 이상 열악하다. 북한 농촌에서는 사실상 하수·오물처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농촌 주민 절반 이상이 오염된 식수를 마시며 살아가면서 질병의 위협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북한 농촌 주민들의 건강권·생명권 등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열악한 북한 농촌 주민들의 인도주의적·인권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시급한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상황 개선을 위해 식량·의약품 등 물품 지원은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북한 농촌개발협력을 통해 북한 농촌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유엔이 밝혔듯이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같은 개발협력은 인도주의·인권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개발협력의 요소들은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인권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요소를 단기간에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요소가 인도주의적·인권적으로 시급한 요소인지를 정하고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사업)들은 일반적인 개발협력이 아닌 인도주의·인권 증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발협력은 범위가 넓어서 일부는 인도주의적 성격이 있으며, 일부는 경제협력적 성격이 있다.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개발협력 사업들중에서 인도주의적 성격이 강한 사업들을 별도로 분류하여 우선 추진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인권적 상황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은 농촌의 개발·진흥 없이는 식량문제 해결과 경제회복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와 함께 농촌개발을 중장기 중대과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추진하는 농촌개발은 북한 당국의 역량 부족과 처한 환경을 감안할 때,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일부 지역의 보여주기식 성과는 있겠지만 실질적 개선에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망 속에서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농촌개발의 문제점과 한계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인도주의·인권적 관점에서 협력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인도주의적·인권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남북간 및 국제사회와 우선적으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보고서는 먼저 북한 농촌 주민들의 열악한 인도주의적 상황, 북한의 농촌 개발 정책 및 한계를 살펴 보고, 국내외 농촌개발 사례 조사, 개발협력과 인권과의 연관성, 일반적인 농촌개발협력 범주·세부사업 등을 검토한다. 이어서 전문가 의견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인도주의·인권적으로 시급한 북한 농촌개발협력 요소(사업)들과 우선 순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로 본 보고서는 각 요소(사업)들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은 다루지 않으며 인도주의·인권적 관점에서 북한 농촌개발협력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을 밝혀 둔다.

2. 본론

2.1. 북한 농촌 실태

북한 주민의 인도주의적 상황

한국의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통계청]에 의하면, 2021년 기준 북한의 국민총소득은 36.3조원으로 남한의 2,094.7조원의 1.73%에 불과하며, 1인당 국민소득(GNI)은 142.3만원(1,243.4달러, 환율 1,144.4원/달러 적용)으로 한국의 4,048.2만원(35,373달러)의 3.5%에 불과한 하위 저개발국가(Less-developed country) 또는 개발도상국(Undeveloped country)이다. 참고로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는 한국을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했다.

반면에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거쳐 오랜기간 지속된 만성적인 경제난·식량난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은 열악해졌다. 핵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 이후에는 기간공업을 중심으로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북한의 국경봉쇄로 제재에 영향이 적었던 경공업 및 주민생활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로 인해 열악했던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최근 화물열차 운행 재개 등으로 의약품 등 일부 물품들이 수입이 되어 약간 나아지긴 했으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큰 변화는 없으며 여전히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이 열악한 상황이다.

스위스의 비정부기구인 ACAPS(The Assessment Capacities Project)는 2022년 12월말 기준 북한 주민들은 만성적인 식량난과 영양부족을 겪고 있으며 의료시설 접근 제한, 안전한 식수를 확보하지 못해 천만명 이상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ACAPS]. 동 단체는 특히 코로나19 이후

정보 부족과 북한의 인도주의 지원단체에 대한 접근 제한으로 지원을 위한 평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북한의 인도적 위기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발생했으며 1천1백만명~1천6백만명(전체 인구의 45~60%)이 식량부족을 겪고 있다. 5세 이하 아동의 18%가 만성적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식량난은 불충분한 농업 생산과 다양한 음식에 대한 접근 불가, 반복적인 자연재해가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약 9백만명이 적절한 의료시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비와 의약품, 전문의료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면서 약 850만명이 안전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촌지역 주민들의 90%가 생활오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시설 부족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아동기금(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UNICEF),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세계은행(World Bank: WB)이 공동 작성한 '2021 아동 영양실조 추정치 보고서'를 통해 2020년 기준 북한의 5세 미만 어린이 18.2%(317,800명)이 발육부진(stunting)을 겪고 있다고 발표했다[UNICEF, 2021]. 동 보고서는 2012년 26.1% 보다는 다소 나아지긴 했으나 미국(3.2%)의 6배, 한국(2.2%)의 7배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로 2017년 기준 북한 어린이의 2.5%(43,500명)가 저체중을 겪고 있으며 국제 기준치 보다 2%나 높은 수치라고 했다. 또한 유엔아동기금은 영양실조를 겪는 북한 어린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래의 표-1과 같이 국제기구들이 평가한 북한의 보건 지표와 남한, 동남아, 전세계 보건 지표의 비교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도적 상황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북한은 전세계 평균 및 동남아와 유사하거나 약간 나은 형편이나 남한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 주민들의 기대수명은 전세계 및 동남아와 유사하지만 남한 보다는 약 10살이 낮으며 성인 사망률은 전세계 및 동남아 보다는 낮으나 남한 보다는 약 2배 높다. 특히 남 북한 지표 비교를 통해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여성, 영유아, 아동의 인도적 상황이 열악한 것을 알 수 있다. 모성 사망비는 남한의 7.5배이며, 5세 미만 사망률은 남한의 5.7배, 영아 사망률은 4배, 신생아 사망률은 남한의 9배, 5

세 미만 저체중은 남한의 13.3배, 5세 미만 만성영양실조는 남한의 9배에 달한다. 북한의 결핵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의 결핵 사망률은 전세계 평균의 3.7배, 동남아의 약 2배, 남한의 12.9배이다. 이러한 통계들은 북한이 동아시아에서 빈곤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1. 국제기구들이 평가한 북한 주민의 보건 지표.

| 구분 | | 북한 | 남한 | 전세계 | 동남아 | 출처(연도) |
|-----|------------------------------|---------------|---------------|----------------|------|-----------------------------|
| 수명 | 기대수명(전체) | 72.3 | 83.2 | 72.7 | 71.1 | World Bank (2019) |
| | 기대수명(남) | 68.6 | 80.3 | 70.6 | 68.3 | |
| | 기대수명(여) | 75.7 | 86.3 | 75.0 | 71.0 | |
| 사망률 | 성인 사망률 (인구 1,000명당) | 132 | 61 | 142 | 171 | WHO (2016) |
| | 성인 사망률(남) | 166 | 85 | 171 | 206 | |
| | 성인 사망률(여) | 98 | 36 | 112 | 134 | |
| | 모성 사망비 (인구 10만명당) | 82 | 11 | 216 | 164 | WHO (2015) |
| |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인구 1,000명당) | 17 | 3 | 37 | 24 | UNICEF (2020) |
| | 영아 사망률 (인구 1,000명당) | 12 | 3 | 27 | 20 | |
| | 신생아 사망률 (인구 1,000명당) | 9 | 1 | 17 | 12 | |
| 결핵 | 결핵 사망률 (인구 10만명당) | 63 (2018) | 4.9 | 17 | 32 | WHO (2020) |
| | 결핵 발생률 (인구 10만명당) | 523 | 49 | 127 | 112 | |
| 영양 | 5세 미만 저체중(%) | 9.3 (2018) | 0.7 (2018) | 13.5 (2018) | - | UNICEF- WHO-WB (2020) |
| | 5세 미만 만성영양실조(%) | 18 | 2 | 22 | 14 | |
| | 5세 미만 급성영양실조(%) | 2 | 1 | 7 | 4 | |
| | 가임기 여성 빈혈(%) | 32.5 | 22.7 | - | - | WHO (2016) |

한국의 통계청이 발표한 남북한의 통계지표[통계청 2022]를 비교해 보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졌으며 2000년대 이후 점차 나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남한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도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표-2~5와 그림-1~4에 나와 있듯이, 북한의 출생아 천명당 영아사망율은 2012년 20.3명에서 2016년 16.2명, 2021년에 12.7명으로 줄었으나 2021년 기준 남한의 5.4배에 달하며, 북한의 출생아 천명당 5세 미만 아동 사망율은 2012년 25.7명에서 2016년 20.0명, 2020년에 16.5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20년 기준 남한의 5.2배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의 5세 미만 발육부진 아동 비율은 2012년 26.1%에서 2016년 21.7명, 2020년에 18.2%로 개선되었으나 2020년 기준 남한의 8배 이상 높다. 또한 북한은 출생아 십만명당 모성 사망비는 2008년에 118명에서 2012년 96.0명, 2017년 89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하였으나 2017년 기준 남한과 비교할 때 여전히 8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표-2. 최근 10년간 남북한 영아사망률(출생아 천명당) 비교.

| 연도 | 북한(명) | 남한(명) | 북한/남한(배) |
|------|--------|-------|------------|
| 2012 | 20.340 | 3.210 | 6.3 |
| 2013 | 18.984 | 3.100 | 6.1 |
| 2014 | 17.804 | 3.006 | 5.9 |
| 2015 | 16.831 | 2.912 | 5.8 |
| 2016 | 16.203 | 2.826 | 5.7 |
| 2017 | 15.251 | 2.743 | 5.6 |
| 2018 | 14.640 | 2.659 | 5.5 |
| 2019 | 13.925 | 2.572 | 5.4 |
| 2020 | 13.320 | 2.487 | 5.4 |
| 2021 | 12.736 | 2.374 | 5.4 |

- 1) 출처: 통계청, (남북)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2022. 12월 기준
- 2) 영아사망률: 1세미만에 사망한 영아수를 그해 1년동안 태어난 총 출생아수로

나눈 비율로서 보통 1,000분비로 표시

그림-1. 최근 10년간 남북한 영아사망률(출생아 천명당)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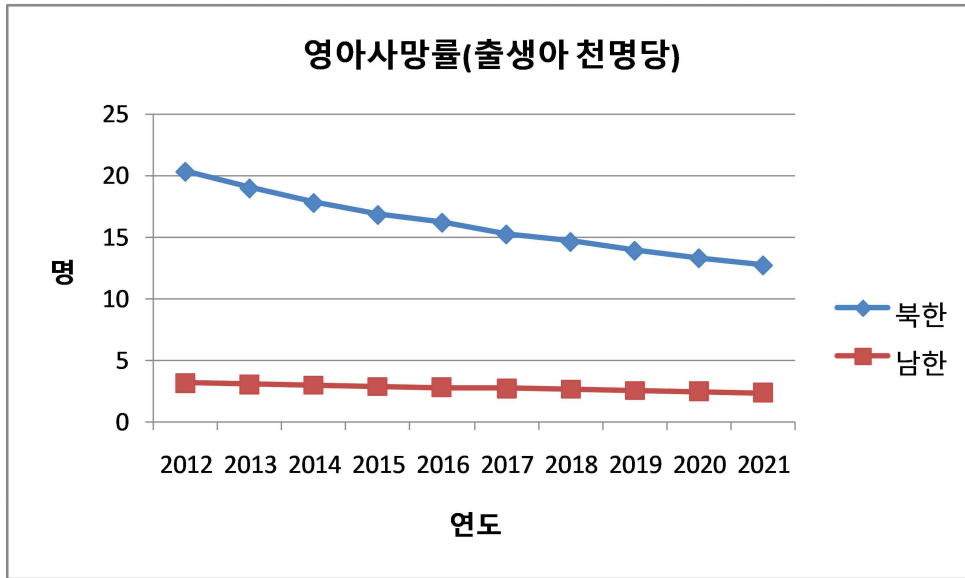


표-3. 최근 10년간 남북한 5세 미만 사망률(출생아 천명당) 비교.

| 연도 | 북한(명) | 남한(명) | 북한/남한(배) |
|------|-------|-------|----------|
| 2012 | 25.7 | 3.7 | 6.9 |
| 2013 | 24.0 | 3.8 | 6.3 |
| 2014 | 22.4 | 3.7 | 6.1 |
| 2015 | 21.1 | 3.4 | 6.2 |
| 2016 | 20.0 | 3.5 | 5.7 |
| 2017 | 19.0 | 3.5 | 5.4 |
| 2018 | 18.2 | 3.5 | 5.2 |
| 2019 | 17.3 | 3.5 | 4.9 |
| 2020 | 16.5 | 3.2 | 5.2 |
| 2021 | - | 3.0 | - |

1) 출처: 통계청, (북)UNICEF 「<https://data.unicef.org>」 2022. 12월 기준, (남)통계청 인구동향과 「<https://kosis.kr>>인구동향조사」 2022. 12월 기준

2) 5세 미만 사망자수/출생자수*1000

그림-2. 최근 10년간 남북한 5세 미만 사망률(출생아 천명당)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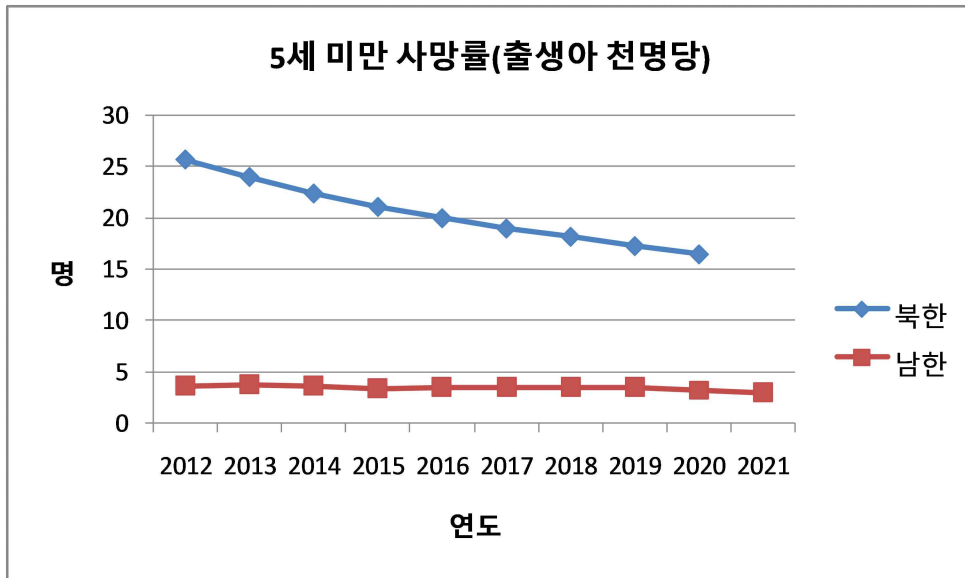


표-4. 최근 10년간 남북한 5세 미만 발육부진 아동 비율 비교.

| 연도 | 북한(%) | 남한(%) | 북한/남한(배) |
|------|-------|-------|----------|
| 2012 | 26.1 | 2.2 | 11.9 |
| 2013 | 24.9 | 2.2 | 11.3 |
| 2014 | 23.7 | 2.2 | 10.8 |
| 2015 | 22.6 | 2.2 | 10.3 |
| 2016 | 21.7 | 2.2 | 9.9 |
| 2017 | 20.7 | 2.2 | 9.4 |
| 2018 | 19.8 | 2.2 | 9.0 |
| 2019 | 18.9 | 2.2 | 8.6 |
| 2020 | 18.2 | 2.2 | 8.3 |

1) 출처: 통계청, (남북) UN 「<https://unstats.un.org/sdgs>」 2022. 12월 기준, 2021년 자료 부재

그림-3. 최근 10년간 남북한 5세 미만 발육부진 아동 비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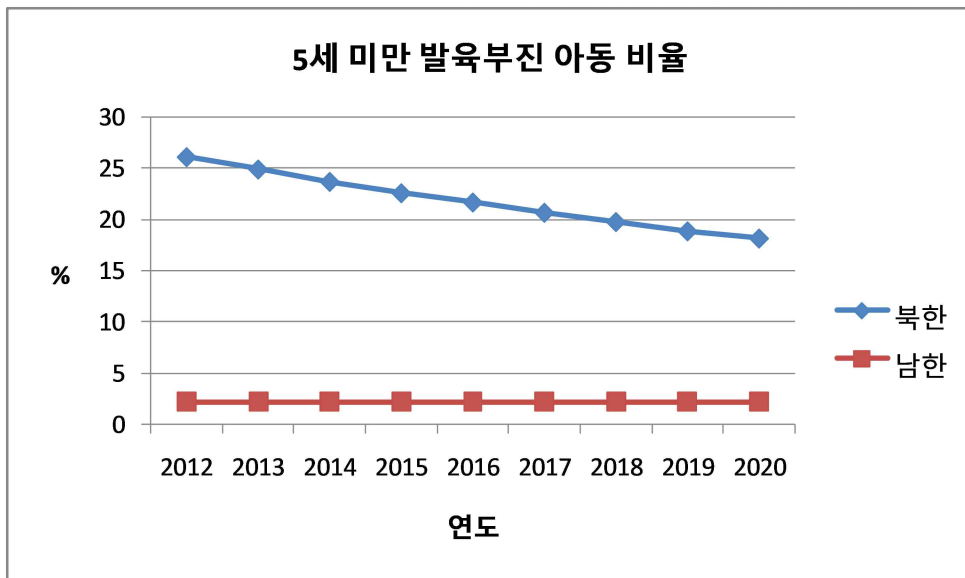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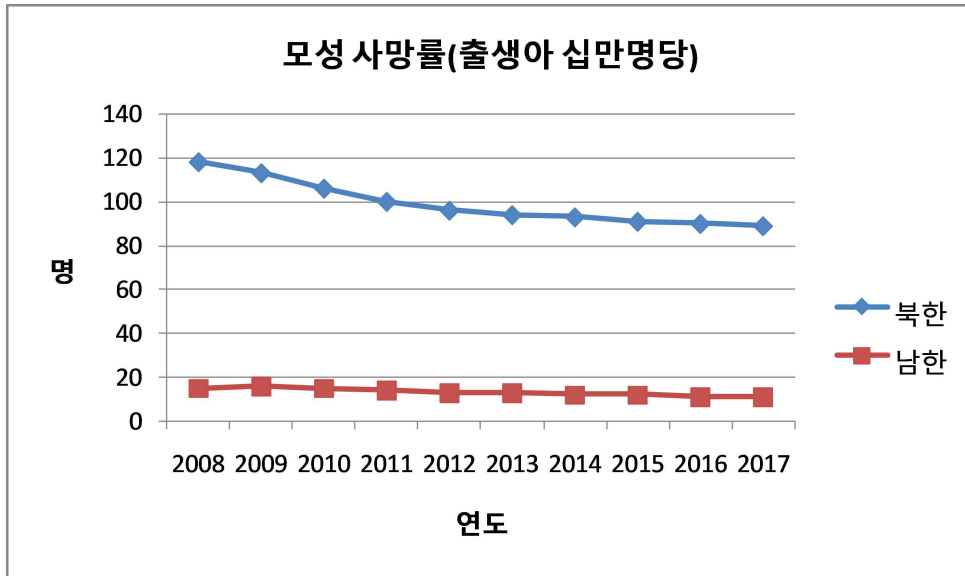


표-5. 최근 10년간 남북한 모성 사망비(출생아 십만명당) 비교.

| 연도 | 북한(명) | 남한(명) | 북한/남한(배) |
|------|-------|-------|----------|
| 2008 | 118 | 15 | 7.9 |
| 2009 | 113 | 16 | 7.1 |
| 2010 | 106 | 15 | 7.1 |
| 2011 | 100 | 14 | 7.1 |
| 2012 | 96 | 13 | 7.4 |
| 2013 | 94 | 13 | 7.2 |
| 2014 | 93 | 12 | 7.8 |
| 2015 | 91 | 12 | 7.6 |
| 2016 | 90 | 11 | 8.2 |
| 2017 | 89 | 11 | 8.1 |

1) 출처: 통계청, (남북) UN 「<https://unstats.un.org/sdgs>」 2022. 12월 기준, 2018년 이후 자료 부재

그림-4. 최근 10년간 남북한 모성 사망비(출생아 십만명당)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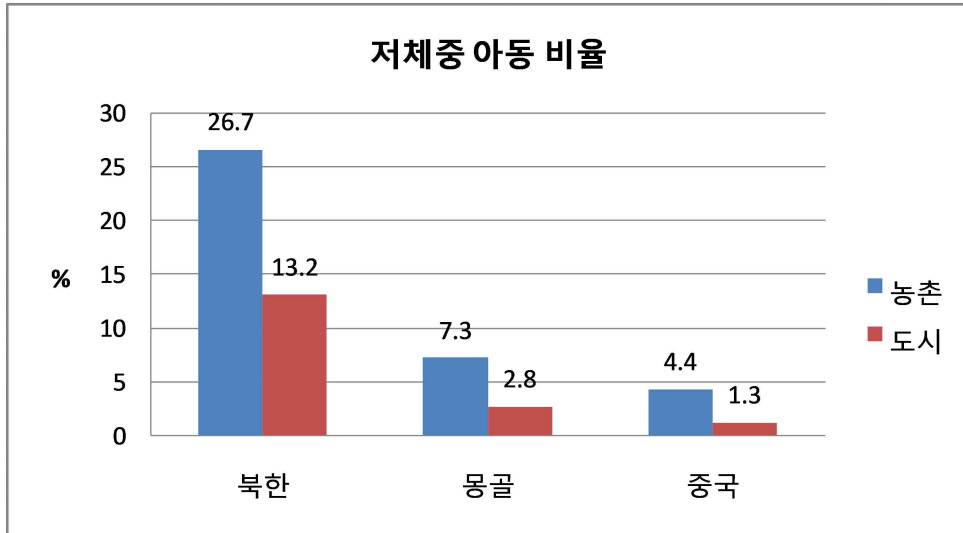
북한 농촌 주민의 인도적·인권 상황

이미 언급했듯이 만성적인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도시 주민들을 포함한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은 심각하다. 북한 전역이 아니라 농촌 지역으로 국한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여타 저개발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도시와 농촌간 격차는 북한에서는 더욱 크게 나타난다. 인공위성 야간조도를 분석하여 북한의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를 추정한 연구[김다울, 2022]에 따르면, 평양이 아닌 다른 지방의 1인당 GRDP(Regional GDP) 평균은 평양의 1인당 GRDP의 71% 수준이며, 이 또한 지역별로 편차가 커서 가장 낮은 지역과 비교하면 4.17배 수준이다. 이러한 도농간 큰 격차는 영양격차로 이어진다. 이것은 도농간 소득격차가 크고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당국의 지원이 도시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농촌은 도시보다 빈곤·보건의료·복지 문제가 심각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농촌은 사각·취약지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계층적으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인 농촌의 아동과 여성의 인도적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유엔아동기금이 북한의 10개도 8,500가구를 대상으로

보건, 생활 등 8개 분야를 조사하여 2018년 발표한 ‘2017 북한 다중지표군집 조사(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MICS)’[UNICEF. 2018]는 북한 농촌의 열악한 식수·위생 환경을 보여준다. 농촌 아동과 여성의 저체중(영양부족 상태) 비율이 도시의 두배에 달하며, 농촌 산모사망율도 도시의 두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에서 아동 저체중률은 농촌 12.6% vs. 도시 7%, 아동의 만성영양실조율이 농촌 24.4% vs. 도시 15.6%, 오염식수비율은 농촌 54.1% vs. 도시 25.4%, 산모의 비의료기관 분만율은 농촌 12.7% vs. 도시 4.6%, 10만명당 모성사망은 평양 39명 vs. 황해북도 61명으로 나타났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는 2015년 발표한 ‘세계식량농업보고서(The State of Food and Agriculture)’에서 북한에서 도시 아동의 13%가 저체중인 반면, 농촌 아동의 26.7%가 저체중으로 도시의 두배를 넘으며 북한의 도농간 빈곤격차 및 북한 농촌의 인도적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FAO. 2015]. 동 보고서를 보면, 북한 농촌 아동의 영양 상태가 동북아 지역의 인근 저개발 국가인 몽골 보다는 3배 이상, 중국 보다는 6배 이상 열악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림-5 참조).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의 농촌 아동의 저체중 비율(26.7%)은 캄보디아(30.6%), 라오스(28.9%) 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나, 몽골의 농촌 아동 저체중 비율(7.3%)과 중국의 농촌 아동 저체중 비율(4.4%) 보다 훨씬 높다.

그림-5. 북한·몽골·중국의 도시-농촌 아동 저체중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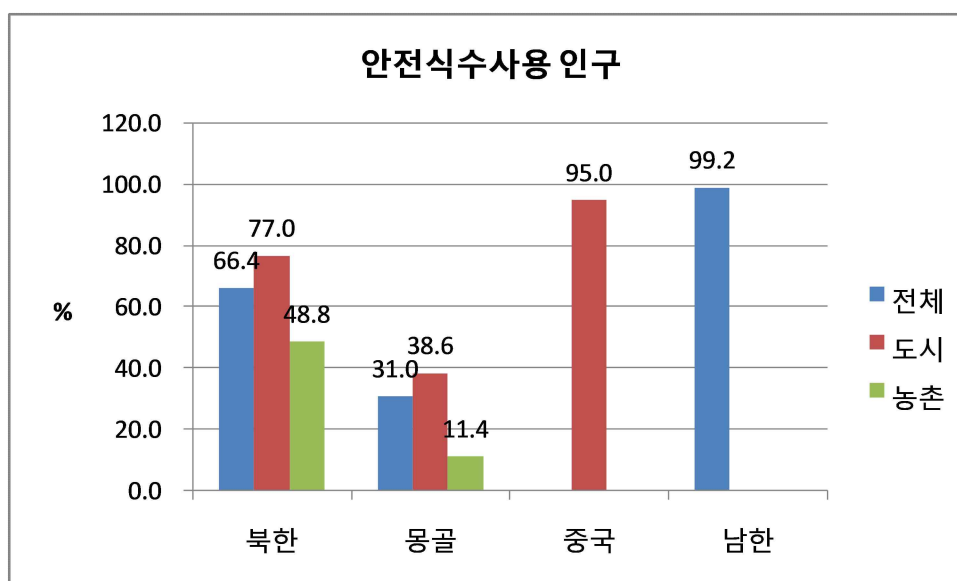


1) 출처: FAO. 2015.

유엔인간정주계획(UNHABITAT)는 ‘2020 세계도시보고서’[UNHABITAT. 2020]에서 2020년 기준 북한의 도시화율은 62.4%이며, 2025년까지 매년 0.85%씩 증가하여 2030년까지는 매년 0.83%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북한의 산업화·도시화 진행에 따라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도농 지역간 격차는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도시와 농촌(편의상 여기서 농촌은 어촌, 산촌 등 도시가 아닌 지역을 통칭한다)간에 에너지와 식수 접근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산모 사망률은 농촌이 도시 보다 3배 높으며 도 단위 지역 아동의 발육부진 비율은 평양의 두 배가 넘는 등 지방과 평양간 격차가 크다고 평가했다[VOA. 2020.11.11.]. 참고로 동 보고서에 제시된 한국의 도시화율은 2020년 기준 81.4%로서 북한보다 높다. 단순히 도시화율의 높고 낮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재정 능력이 부족하여 도시 중심으로 자원을 투입하고 농촌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유엔통계위원회(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는 농업에 고용된 경제활동인구 비율, 주거지의 전기·수도 가용성, 의료·교육·휴양시설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도시와 농촌(시골)을 구분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도농간 격차가 모호해지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도농간 생활 수준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VOA. 2020.11.11.].

<식수 문제> 북한 농촌주민들의 인도적 상황 및 인권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문제는 식수, 하수처리, 에너지 분야이다. 먼저 북한 농촌주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로 열악한 식수문제를 보다 심도있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안전한 식수는 건강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안전하지 못한 식수는 설사·장티푸스·피부병 등의 주요 원인이 된다. 북한은 수리시설이 부족하여 가뭄 시기에 물 부족이 심한데다 북한 농촌 지역은 상하수도 보급률이 낮아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그림-6. 북한·몽골·중국·남한의 안전식수 사용 인구 비교.



1) 출처: UNWATER.

유엔 기구들[UNICEF, 2020][UNWATER]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북한의 ‘안전한 식수에 접근하는 인구(Population access to safe drinking water)’(이하 안전식수 사용 인구) 비율은 66%로서 세계 평균(74%) 보다 8% 낮으며 몽골(31.0%) 보다는 높으나 남한(99.2%)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는 북한 전체 주민(2019년 2,545만여명)[DPRK, 2021]의 34%인 865만명이 안전한 식수를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농촌 주민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데 있다. 북한에서 안전식수 사용 비율은 도농간 큰 격차를 보이는데 도시가 77%인 반면 농촌은 48.8%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농촌 주민의 절반 이상(51.2%)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오염된 식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한국은 안전식수 사용 비율이 도시와 농촌을 포괄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99.2%인 것과는 대조적이다(그림-6 참조).

표-6. 북한의 안전식수 사용 인구.

| | 전체(%) | 도시(%) | 농촌(%) |
|---------|-------|-------|-------------|
| UNWATER | 66.4 | 77.0 | 48.8 |
| 북한 VNR | 60.9 | 71.3 | 44.5 |

1) 출처: UNWATER, DPRK 2021.

북한은 2021년 유엔에 제출한 자발적국가검토(VNR: Voluntary National Review)[DPRK 2021]에서 안전식수 사용 인구비율이 2017년 기준 60.9%라고 하면서 도시가 71.3%, 농촌이 44.5%라고 밝혔다. 북한이 스스로 발표한 안전식수 사용 인구 비율은 유엔이 발표한 수치보다 다소 낮다(표-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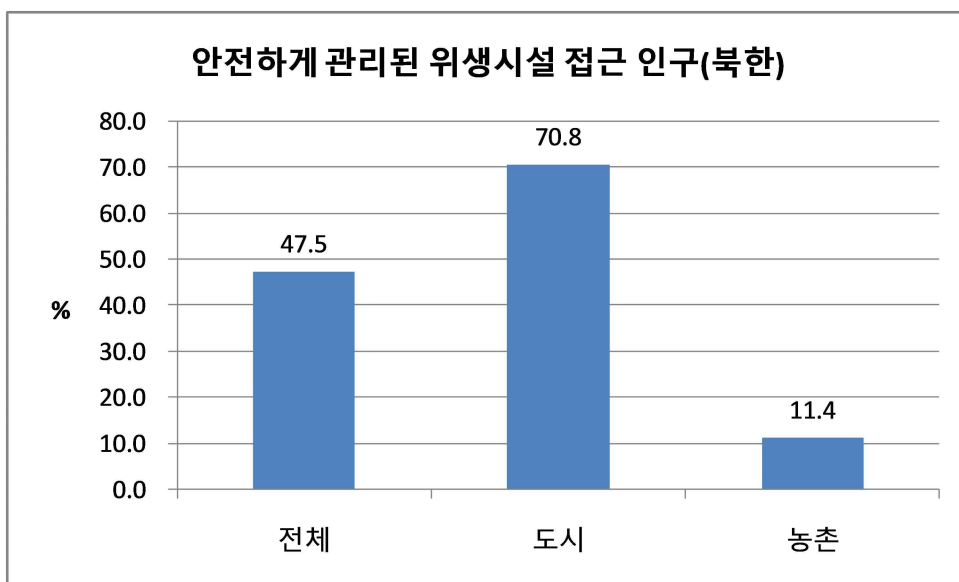
유엔아동기금의 MICS[UNICEF2018]에서 조사 대상 가구의 83.2%가 식수를 끓이거나 정수처리 없이 그대로 마시고 있었다. 전체 가구의 36.6%가 대장균이 검출된 오염된 식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 지역 가구의 54%가 오염된 식수를 마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오물처리 문제> 북한 농촌에서는 하수·오물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촌주민들이 각종 수인성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 북한 당국도 VNR[DPRK 2021]에서 “수질 개선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근 몇 년간, 하수처리장의 불완전한 기술 여건과 장비·시약의 부족으로, 일부 지역에서 산업 및 가정용 폐수가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채 강이나 하천으로 방류되고 토양으로 배수되면서 수질 오염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수처리 부실에 따른 수질 오염 문제를 언급하면서 수질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동 보고서에서 북한은 수질 개선을 위해 ‘상수도법’(2009년 11월 25일 채택)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으며 모든 인민들에게 식수 공급을 원만히 보장하는 것과 2030년까지 국가환경보

호 기준에 맞게 가정용·산업용 폐수의 100% 처리 보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안전한 식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력이 되지 않아 상수도 보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북한 농촌에서는 하수·오물처리가 시급하고 중요하다. 북한 농촌에서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가정은 우물을 파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데 하수처리가 되지 않아 심각한 수질 오염을 야기하고 오염된 물이 다시 우물 등 지하수로 유입되어 농촌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북한이 VNR에서 공개한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 인구 비율(Population access to safely managed sanitation facility)’은 전국 평균은 47.5%이며 도시에서는 비교적 높은 70.8%이나 농촌은 11.4%에 불과하다(그림-7 참조). 이는 북한의 농촌 지역에서는 사실상 하수·오물처리가 되고 있지 않으며 농촌 주민들은 상시적으로 수질 오염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상수도에 접근하지 못하는 농촌 주민 절반 이상이 오염된 식수를 마시며 살아가고 있으며 질병의 위협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인도적·인권적 측면에서 북한 농촌 주민들의 건강권·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

그림-7. 북한의 안전하게 관리된 위생시설 접근 인구.



1) 출처: DPRK 2021.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는 ‘세계 물 개발 보고서 2020(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2020)’[UNESCO. 2020]에서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에 의한 상하수도 파손으로 수자원 관리가 어려워지고 물 오염으로 수인성 감염병이 확산되어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수의 전문가들도 북한의 상하수 문제와 북한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지적하면서 특히 북한 농촌에서 안전한 식수 공급이 가장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은다. 의사 출신 탈북민 최정훈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무너진 상하수도 시스템이 제대로 복구되지 않아 해마다 많은 주민들이 각종 수인성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VOA. 2020.3.24.]. 최교수에 따르면 상수도에 전기 공급이 되지 않아 상하수도가 모두 파손돼 지하에서 서로 섞이면서 오염이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재래식 퇴비용 화장실의 보편화로 지하수 오염 가중이 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이며, 상하수도 시설 교체 및 설치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북한 당국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호식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심각한 에너지난(전력 부족)과 정수시설 자재·부품 부족으로 정수장 가동이 원활하지 않아 대장균에 오염된 음용수원은 23.5%, 안전한 정수사용 인구 16.5%, 하수처리율 14%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분뇨의 90%가 농경지 비료로 사용되어 병원성 세균에 노출되어 있으며, 큰 도시에서도 하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되어 수돗물도 중금속과 세균으로 오염되어 반드시 끓여 먹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2019.3.21.][BBC. 2019.6.26.].

실제 국제기구의 조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UNICEF. 2018]. UNICEF의 MICS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도시 주민의 76%가 하수도나 정화조에 연결된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반면, 농촌 주민의 76%는 구덩이 형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 가구 단위로 보면 농촌 가구의 9.5%만이 하수도로 연결된 화장실을 사용하며 나머지 90.5%는 하수처리되지 않은 화장

실을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농촌 지역에서 분뇨의 90% 이상이 지하수로 스며들거나, 우천시 흘러 넘쳐나와 식수로 유입되거나 집 주변으로 노출되는 비위생적인 상태이다.

지난해 북한의 공식매체인 중앙통신(2022.6.16.)은 ‘황해남도 지역에서 급성 장내성 전염병이 발생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정상비약을 보냈으며 도시 경영성에서 상하수도망의 원만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선진국에서는 거의 자취를 감춘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등 수인성 질병이 상하수도 시설이 열악하고 주민들의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한 북한에서는 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지역별 봉쇄·격폐를 시행하면서 집단생활이 증가하면서 수인성 전염병이 더욱 확산했다고 보고 있다[연합뉴스, 2022.7.22.]

<에너지 문제> 북한 농촌 주민들의 에너지 문제는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주민들은 전력 등 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겨울철에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택 단열 상태도 부실해서 추위로 인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북한 당국도 VNR에서 전기에 접근하는 인구 비율이 2019년 기준 34.6%(VNR의 부록 DPRK Indicators and Values 참조, 2015년 36.6%, 2018년 36%)이며, 농촌에서 전기 접근성 지수가 낮다고 하면서 전력 공급 확대와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농촌 주민의 2/3 이상이 전기를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수치는 전기에 접근하는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지 얼마나 충분히 사용하고 있는지 등 실제 사용 현황(시간, 빈도수)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남한과 같이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되는 것과 달리, 북한은 열악한 전력 사정으로 잦은 정전과 제한된 시간만 전력이 공급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전력에 접근 가능한 주민들도 원하는 시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사용 시간도 짧아 실제 전기 사용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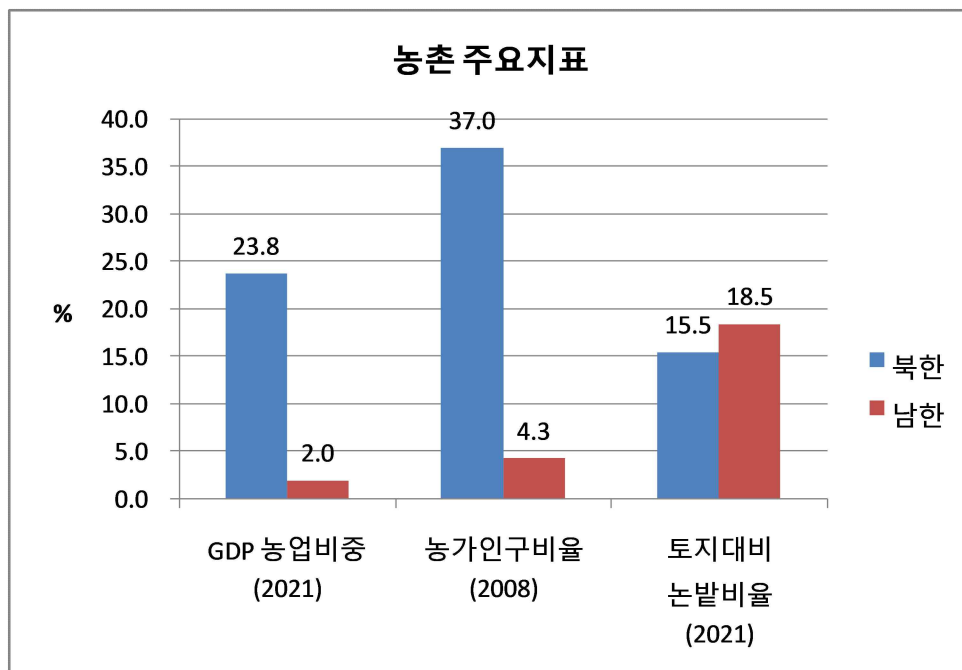
많은 국제사회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국경봉쇄 및 이동제한 등으로 북한 농촌은 식량·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나빠져 농촌 주민들의 인도

적 상황은 한층 악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2.2. 북한의 농촌개발 정책 및 한계점

북한은 국토의 74%가 산악 지대이며[DPRK 2021], 농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사실상 농업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림-8에서 보듯이, 2021년 기준 북한은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제조업이 18.3%인 반면 농업이 23.8%를 차지하며, 논·밭은 국토의 15.5%이며, 2008년 기준 농가인구는 36.8%이다[통계청]. 참고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남한은 제조업 비중 27.9%, 농업 비중은 2.0%, 논밭은 국토의 18.5%이며, 2008년 기준 농가인구 비중은 6.5%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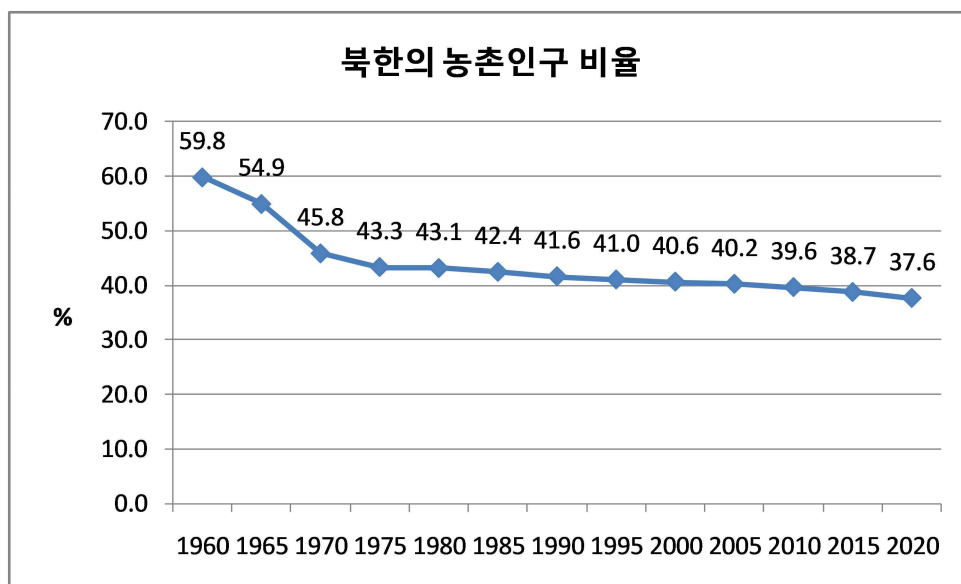
그림-8. 남북한의 농촌 주요지표 비교.



1) 출처: 통계청.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남한(2021년 81.4%)만큼은 아니지만 북한도 도시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2021년 기준 62.4%에 이르고 있다[UNHABITAT].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전후 복구 및 중화학공업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농촌 인구를 도시로 이주시켰다. 북한에서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1960년에 59.8%였던 농촌의 인구가 2020년에는 37.6%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그림-9 참조). 북한의 기계화 부족으로 절대적인 농업인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농촌인구의 감소는 식량생산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식량증산이 절실한 북한의 입장에서는 방지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산업화·도시화는 도농간 격차 심화, 농촌인구 감소, 식량생산 감소, 농촌 경기 침체 문제, 농촌 생활환경 악화, 농촌 주민들의 인도적·인권적 상황 악화, 농촌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 가중, 농촌 청년들의 이탈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해 왔다. 역설적으로 국가의 산업화 정책이 식량생산 감소에 따른 수입 증가, 식량가격 상승, 국가 재정 악화로 산업 발전의 저해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남한에서도 1960년대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국가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남한의 새마을운동은 북한의 농촌개발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며 뒤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그림-9. 북한의 농촌인구 변화 추이.



1) 출처: 통계청(세계은행 2022년 12월 자료 인용).

북한의 농촌개발 정책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은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농업생산성이 정체되자 1964년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 등 농촌 기술혁명, 주체농법 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고 사회주의 농촌건설을 추진하였다. 1960~1970년대까지 농촌문화주택 건설과 함께 병원, 학교, 행정시설, 생활 편의시설, 지방공장 등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국가급 건설사업인 4대 자연개조 사업(서해갑문 건설, 태천발전소 건설, 30만정보 간척지 개간, 20만정보 새땅찾기)을 추진됨에 따라 농촌개발은 정체되었으며 1990년대 경제위기로 크게 위축되었다. 또한 2000년대 들어 시장화 진전에 따른 도시 성장으로 도농간 격차가 벌어지고 엄격한 거주이전 통제에도 도시로 이전하려는 농촌인구 유출이 지속되면서 농촌의 환경은 침체되었다. 농촌의 침체로 주로 1960~70년대에 지어진 농촌 주택들은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 발표한 ‘국가발전5개년계획’에서 농촌을 비롯한 지방의 낙후성과 생활고를 언급하고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적으로 매년 시군에 시멘트 1만톤씩 보장 추진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국가발전5개년계획’에서
제시된 농촌환경 개선 관련 내용**

- 시,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추동하여 지방경제를 끌어 올리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를 닦아야 함.
- 지금 농촌을 비롯한 시, 군인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렵고 뒤떨어져 있음.
- 이제부터는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고 지방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주목을 돌리자고 함.
- 국가적으로 해마다 모든 시, 군들에 시멘트 1만씩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여야 함.
- 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는 시,군이 자체의 경제적토대를 원만히 갖추어 줄 수 있도록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발전하도록 특혜조치도 취해주면서 정확한 지도와 방조를 따라 세워야 함.
-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치고 국가적 지원을 늘려 농촌 진지를 결정적으로 강화하고 농업생산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사회주의 농촌을 문명하고 부유하게 전변시켜나가야 함.

농촌 문제 해결 없이, 특히 농촌 환경 개선 없이는 경제회복을 위한 지방 공업 발전과 식량증산도 어렵다는 북한의 현실 인식과 그동안 식량증산에만 집중해 농촌 환경 개선에는 소홀했다는 자기반성은 공식매체를 통해서 확인된다. “지난 시기 우리는 알곡증산을 위한 사업에만 치중하면서 농장의 면모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소홀히 하였다”(노동신문. 2022.1.29.).

북한은 2021년 9월 농촌테제 강령의 제도화 차원에서 「시·군 발전법」을 제정하여 지방의 역할·책임을 강화하고 중장기 국가 중대과업으로 농촌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하였다. 또한 2021년 12월에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농촌진흥을 강력히 다그쳐 나라의 농업을 확고한 상승단계에 올려세우고”,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이상촌으로 만들자는 것이 당의 농촌건설정책”이라며 ‘농촌개발 과업’을 제시했다(노동신문. 2022.1.4.). 현재 북한의 농촌개발 방향은 ‘농촌 생활 환경 개선과 식량 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자연경관·특색에 맞게 살림집과 함께 다양한 공공시설 및 교육·문화·예술·체육·편의시설들을 함께 건설’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북한의 농촌개발 방향

-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생활환경 제공
- 수리화·기계화·화학화·전기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
- 해당 지역의 특성을 뚜렷이 살려(지역의 자연기복을 이용하여 **경관을 잘 살려**) 건설
-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을 다양하게 구성하면서도 전체적인 통일 보장
- 가뭄·수해 등 자연피해를 받지 않게 위치 선정, **현대적 미감에 맞게** 살림집 건설
- 학교, 문화회관들과 사무청사, 탁아소와 유치원, 병원을 비롯한 **공공건물들도 특색있게 구성, 다양한 문화예술·체육활동 보장**

북한은 농촌개발을 위한 법제 정비 및 농촌개발 과업 제시 이후 각 지역이 자기 지역 특성에 맞게 설계부터 필요한 자재·장비들을 자체로 조달해 농촌살림집 건설 등 농촌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2022년 1월에는 “시군 건설세멘트보장법”을 채택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지방이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설 것을 독려하고 일부 지역들의 성과를 홍보하면서 부진한 지역에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분발을 촉구하였다[북한정보포털]. 공식매체에 나온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전국의 모든 농촌마을을 삼지연시 농촌마을의 수준으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리상촌으로 전변’시키고, 설계 단계에서 ‘주체적 건축미학사상을 구현’, ‘지형조사와 측량에 기초하여 단층·다락식·소층 배합한 농촌살림집 배치안과 조감도 작성, 과일나무 및 화초 심기, 마을도로의 합리적 배치’ 등을 반영하고, ‘독창성, 현대성, 문화성과 함께 정치성 철저히 보장’할 것 등을 강조하였다. 특히 ‘지난 시기의 천편일률적인 설계방식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우리 인민의 미감과 정서에 맞으면서도 해당 지역의 특성과 세계적인 건축발전 추세를 고려하여 작성’하도록 강조한 것은 해외 건축 사례를 조사·연구하여 기능과 함께 미적 측면(경관)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건축을 통해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사상을 지배하고 통제하거나 체제 우수성을 홍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으며, 지역의 자연적 경관과 어울리는 농촌을 조성하려는 것은 향후 농촌관광까지도 염두에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본다.

북한의 농촌살림집 설계 방향 예시(2022.7.24., 노동신문)

- 산간지대편, 별방지대편, 해안지대편으로 나뉘어 작성된 설계안들은 자연기복을 리용하여 건물들을 배치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안지대는 해안가 맛이 나게, 산간지대는 산간지대 맛이 나게, 별방지대는 별방지대 맛이 나게 매 건물들의 독특한 형식을 살리면서도 건물들 사이의 예술적 호상성, 호환성, 연결성도 보장하였음.
- 단층살림집은 다락식 평지붕형과 다락식 경사지붕형, 평지붕형, 경사지붕형으로, 소층살림집은 독립형 평지붕살림집과 독립형 경사지붕살림집으로 나뉘어 해당 지역의 **자연 지리적 조건과 력사적인 풍속, 주변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하였음.**
- 해안지대의 단층살림집은 여름에는 시원한 느낌을 주는 푸른색으로 지붕처리를 하였고 **태풍피해를 적게 받도록 집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도록 하였음.**
- 산간지대의 소층살림집은 산을 끼고있는 주변환경에 어울리게 **지붕에 경사각도를 주어 눈석이물이 흘러내릴 수 있게 하였음.**
- **지난 시기의 천편일률적인 설계방식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우리 인민의 미감과 정서에 맞으면서도 **해당 지역의 특성과 세계적인 건축발전 추세를 고려하여 작성됨.**

2022년 10월 10일에 북한은 2월에 국가적 사업으로 착공한 ‘련포온실농장’을 준공하였으며 여기에는 ‘850여동의 채소 온실과 함께 113개 호동에 1,000여세대의 99가지의 각이한 형식을 갖는 단층, 소층 살림집들과 학교, 문

화회관, 종합봉사시설’이 건설되었다. 아래의 노동신문 보도를 보면, 학교를 포함한 공공·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주거단지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면서 동시에 향후 농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공급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연포온실농장 공공·편의시설(2022.10.14., 노동신문)

- 학교, 병원, 약국, 상점들도 있으며 목욕탕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들도 있음.
- 이 모든 것이 살림집 구획 안에 자리잡고 있어 주민들이 짧은 시간에 때없이 찾아갈 수 있게 되어 있음.
- 보다 특징적인 것은 약국과 상점, 체신분소와 빨래집 등 모든 편의 및 봉사시설들이 하나의 건축군을 이루고 나란히 배치되어 있어 종합봉사소라고 할 수 있음.
- 탁아소와 유치원도 지붕을 잇대고 나란히 자리잡고 있어 여러명의 어린이를 둔 부모들에게 여간만 편리하지 않음.
- 인공잔디를 깔 운동장과 여러 종목의 경기를 할 수 있게 꾸려진 체육관을 비롯하여 모든 교육조건이 훌륭히 갖추어진 함주군 련포고급중학교는 세상에 둘도 없는 대규모 온실농장의 앞날을 떠메고 나갈 미래의 주인공들이 자라나는 배움의 요람임.

2022년 9월에 북한은 농촌개발과 관련된 ‘사회주의농촌발전법’, ‘원림녹화법’을 채택하였으며, 여러 시군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농촌살림집 완공 성과를 보도하였다. “문화주택들에는 여러 칸의 살림방과 부엌, 세면장을 비롯하여 주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이 원만히 갖추어져 있으며 집 주변에는 과일나무들이 뿌리 내려 마을의 풍치를 한껏 돋우고 있다. 문화회관, 진료소, 종합편의 시설 등에는 농촌주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였다”고 한 보도(노동신문, 2022.11.7.)를 보면, 새로 건축된 농촌 살림집은 방, 부엌, 세면장 등 나름 기본적인 생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어느 정도 마을 공공·편의시설이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을 부대시설인 문화회관과 관련해서 “농업근로자들의 문화수준이 높아야 사상정신적 풍모와 높은 자질을 갖추고 농촌진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참답게 이바지해 나갈수 있다”하면서 “문화회관을 명절이나 휴식일에

만 리용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되며 농업근로자들 모두가 하루 일을 마치고 공연준비도 하고 기량도 더욱 련마하면서 문화정서생활을 진행하는 친근한 장소, 즐겨찾는 곳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라고 보도했다(노동신문. 2022.11.26.). 여기서 문화회관이 휴식과 교양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북한이 농촌 주민들을 사상적으로 교육·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음 보도는 농촌마을의 체육시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시각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명천군 마안농장에서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고 있다.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할 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이곳 일군들은 대중체육활동계획을 월별로 구체적으로 세우고 이 사업에 누구나 한 사람같이 참가하도록 조직사업을 면밀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장에서는 명절과 휴식일을 비롯한 여러 계기에 바줄당기기, 룡구, 배구 등 다양한 체육경기들을 진행하고 있다. 집단의 단결력도 남김 없이 과시되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대중체육활동은 농장원들의 정신력을 북돋아주고 체육을 생활화, 습성화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계기로 되고있다. 농장에서는 대중체육활동을 단순한 체력단련이 아니라 농장원들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그들에게 필승의 신심을 안겨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이 사업에 힘을 넣고 있다. 집단주의 위력을 더욱 백배해주는 대중체육사업과 더불어 온 농장에 혁명적 량만과 전투적 기백이 차넘치고 있으며 당면한 영농전투에서도 혁신이 창조되고 있다”(노동신문. 2022.9.22.).

그림-10은 최근 북한 매체에 보도된 각 지역 시군들이 건설한 농촌살림집들을 보여준다.

그림-10. 최근 건설된 북한의 농촌 살림집 단지 사례.





1) 출처: 노동신문.

북한의 공식매체들은 농촌 살림집의 외관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내부 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칸의 살림방과 부엌, 세면장을 비롯하여 생활상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이 원만히 갖추어져” 있다고만 할 뿐 내부 사진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화장실 형태나 난방, 상하수도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북한이 공개하는 제한된 정보로 인해 북한에서 새로 공급되는 농촌 주택의 질과 공급량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일부 사례 그리고 외관만으로 주민들의 열악한 상황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현실을 고려할 때, 북한이 제시한 농촌건설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탈북민 출신 김혁 한국농어촌공사 박사는 삼지연시나 연포농장처럼 중앙급건설 사업이 아니면 각 시군이 자체 조달을 통해 건설할 수 있는 농촌 주택은 매우 제한적으로 농촌 마을(리단위)이 전국적으로 약 3,400여개가 있으며 여기에는 4인 기준 약 250만 가구가 존재하는데 이를 전부 개량하려면 가구당 2천만원(남한 원), 총 50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KBS. 2023]. 또한 북한은 이를 위해 총 2억5천만톤의 시멘트가 필요한데 북한이 목표로 하는 연간 800만톤 생산도 버거운 상황을 감안하면 최소 25년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김혁. 2022]. 김혁 박사는 시멘트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연료, 전기, 운송이 보장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정치적 위상이 높은 지역이거나 건재공장 인근 지역, 재난피해지역 등 김정은 체제의 치적으로 홍보 가치가 높은 특정 소규모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개발이 되더라도 인센티브가 보장되는 개인영농으로 전환되지 못한다면 생산증대가 되지 못해 도농간 소득격차를 줄이지 못하게 되고 결국 농촌개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노동신문에서 "지난해 여러 지역에서는 건설역량 보강과 건설기능공 양성에 힘을 넣어 일련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놓고 볼 때 일부 시, 군에서 건설역량 강화사업은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진행되지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한 점을 볼 때, 중앙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여력이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성과가 있으나 여타 지역에서는 성과가 미진함을 알 수 있다(노동신문. 2023.2.25).

전문가들의 의견과 북한의 보도 등을 볼 때, 북한의 농촌주택 건설은 주민들의 생활권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보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전기, 난방, 상하수도 시설 등 인프라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주택 외관 중심으로 보여주기식 건설과 홍보에 집중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최은주 박사는 '주택은 상하수도 시설 같은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그 주택을 활용할 때 편리함을 누리고 자원 낭비도 안되는데 북한은 그렇지 못해서 실제로 그걸 누

릴 수 있는 주민들은 매우 한정돼 있다’는 것이 북한의 농촌살림집 건설의 핵심적인 문제점이라고 지적한다[KBS. 2023]. 현재 만성적 전력난·에너지난과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상하수도 시설은 북한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외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2.3. 농촌개발과 인도·인권적 연관성

2.3.1. 농촌개발 사례 및 모델

2.3.1.1. 한국의 새마을운동 사례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세계적인 저개발국가였던 한국의 농촌 상황과 농촌진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개발 이전의 과거 한국의 농촌과 유사한 북한 농촌을 이해하고 개발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농촌개발 측면에서 새마을운동의 전개과정과 성과를 살펴보고 이를 북한 농촌개발협력에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세계적으로 저개발국 농촌개발 사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공적 사례로 우리나라에서 70년대 전개되었던 새마을운동을 들 수 있다. 일부 한계도 있었지만 새마을운동을 계기로 우리 농촌은 이전과는 다른 급속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새마을운동은 70년대 시작된 이후 그 모습을 달리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열악한 저개발국가인 북한 상황을 고려하여 시기를 초기 단계인 70년대로 하고 지역을 농촌에 한정하여 살펴본다.

먼저 새마을운동의 추진 배경을 보면, 1960년대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중화학공업 위주의 1·2차 경제개발 계획으로 유래 없는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많은 인력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들자 농촌은 피폐해지고 늘어나는 도시 노동

자의 식량공급이 어렵게 되었다. 도시와 농촌간, 그리고 공업과 농업간 격차가 심화되었으며 식량 수입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등으로 국가의 공업발전과 경제성장이 저해받을 정도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농촌을 부흥시켜 경제성장의 기반으로 개편하기 위해 새마을운동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다[여주시]. 물론 당시 집권 여당의 주요 정치기반인 농촌의 지지율이 농촌의 침체로 떨어진 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평가도 있으나[여주시] 여기서는 정치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추진 내용> 1970년대 새마을운동은 표-7에 나와 있듯이 1970년 10월 ‘새마을가꾸기사업’을 시작으로 기반조성, 자조발전, 자립완성 등 3단계로 추진되었다[새마을운동중앙회].

표-7. 단계별 새마을운동의 전개 과정.

| 단계 | 시기 | 목표 | 주요 내용 |
|------|-----------|---|---|
| 기반조성 | 1971~197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마을정신 점화 ○ 기초환경사업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대 새마을가꾸기사업 추진 ○ 새마을지도자 선발 및 교육 실시 ○ 마을발전 수준 등급화 및 차등 지원 |
| 자조발전 | 1974~197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환경 정비 ○ 생산기반 확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직장·공장으로 확산 ○ 사회 지도층 교육 실시 ○ 3대 운동 및 4대 시책 추진 |
| 자립완성 | 1977~198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반 원비 ○ 농가소득원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마을사업 광역화 추진 ○ 주택개량 등 복지환경사업 추진 ○ 민간주도 새마을추진체계 확립 |

새마을가꾸기사업은 전국 33,267개 각 마을에 시멘트 355포를 공급하면서 마을공동이용시설 건립, 마을도로 및 주택 개량 등 10대 새마을가꾸기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경상북도].

10대 새마을운동가꾸기사업

1. 마을산 푸르게 가꾸기, 2. 마을 진입로 넓히기, 3. 마을 앞 소하천 뚝 보수, 4. 공동퇴비장 설치, 5. 소류지 모래 파내기, 6. 관정 보수 및 관리, 7. 마을 청소 및 하수구 정비, 8. 공동 우물 만들기, 9. 공동 빨래터, 10. 쥐 없는 마을 만들기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초기에는 마을회관, 농산물저장소, 도정공장, 가공공장, 공동 창고·퇴비장·작업장·구판장·건조장·축사·이미용소·목욕탕, 경로당 등의 공동이용시설 등을 건설하였으며, 이후 마을진입로·마을안길·농로 정비, 교량·보·도수로·소류지·양수장 건설,관정 집수암거·배수장 건설, 하수구 정비, 주택개량 등의 광범위한 농촌 건설 사업이 진행되었다”[여주시].

새마을운동의 세부 프로그램은 표-8과 같이 농촌 소득증대, 농촌 인프라 개발, 농촌 지역사회 발전, 농촌 보건·위생환경 개선, 농촌 사회·문화활동 개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조한덕 2005].

표-8. 새마을운동 세부 프로그램.

| 프로그램 | 사업내용 |
|------------|---|
| 소득증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소득증대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작물 증산, 축산·산림·어업 육성, 농업 마케팅 개발, 토질 개선 등 ○ 농업외 소득증대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가공, 소규모 농촌기업 육성, 농어촌 관광 자원 개발 등 |
| 인프라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관개 댐 및 농수로 개발, 농지정리, 농로 개선, 마을도로 개량, 소규모 다리 건설, 배수시설 설치, 하천 뚝 정비 ○ 주택개량, 울타리 개량, 정원 개발 등 |
| 지역사회 발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유치원·탁아소 건립, 마을회관 건립, 마을휴게소 건립, 마을도서관 설립, 마을환경미화 등 |
| 보건·위생환경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수 개발, 부엌 개량, 화장실 개량, 하수시스템 정비 등 |
| 사회·문화활동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단위 위원회 설립, 부녀회·농민회·청년회 등 조직, |

새마을운동 사업중 주택개량사업으로 가장 먼저 추진한 사업이 초가 지붕을 슬레이트나 기와로 개량하는 ‘지붕개량사업’이었다. 당시 대부분 농촌 주택은 초가지붕이었으며 매년 새 이엉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우천시 비가 새고 화재에 취약하며 매년 교체비용도 상당한 부담이었다. 1972년 시작된 지붕개량사업은 1978년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후 화장실, 거실, 주방, 상하수도, 연탄 난방 등을 설치하는 주거 현대화(문화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점은 북한 농촌개발협력에서 참고할 만하다.

새마을운동 당시 절미운동과 혼분식 장려 운동이 전개되었다는 것은 흥미롭다. 정부는 양곡관리법이라는 행정명령을 통해 1969년부터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오후 5시까지 쌀로 만든 음식 판매를 금지하는 ‘무미일’ 또는 ‘분식의 날’을 시행하였다. 주식인 쌀이 부족했던 한국은 음식점에서 모든 음식에 보리와 국수를 25% 이상 포함하도록 했으며 1977년 쌀 자급을 이룬 후 완화되었다.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도 최근 밀보리 생산 확대 및 식생활 개선 정책을 펼치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자연보호 운동과 산림녹화사업도 추진하였다. 한국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화되어 전체 산림의 68%가 민둥산이었다. 장마철이면 마을이 물에 잠기고 토사가 흘러 내려 산사태가 나거나 하천에 쌓여 홍수가 났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계기로 자연보호헌장 선포, 치산녹화사업 등을 전국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식목일을 휴일로 제정하여 전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 결과, 국제사회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하게 인공조림에 성공한 사례”, “기적이자 개도국의 성공 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국민들에게 자연과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일상에서 자연보호를 실천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새마을운동중앙회].

<성과> 새마을운동 성과는 경제발전 측면에서 보면, 농촌진흥을 통한 국가경제발전, 국민소득증대, 도농간 격차해소, 지역간 균형발전, 농촌의

자본형성 등을 들 수 있으며, 사회개발 측면에서 농촌의 생산기반시설 확충, 주택 및 생활개선, 교통·통신환경 개선, 복지·생활수준 향상 등이 있으며, 정신계발 측면에서는 합리적·생산적 생활태도 형성, 자신감 고취 등 의식 개선 등이며[새마을운동중앙회] 구체적인 내용은 알아 보기 쉽게 표-9에 정리하였다.

표-9. 새마을운동의 성과.

| 구분 | 성과 | |
|---------|-------------|---|
| 경제발전 측면 |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소득증대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농촌의 공산품 수요 증대 및 산업발전에 기여 * 경제성장률 상승: 1972~1976 10.2% → 1977~1985 6.5% * 1인당 국민소득 증가: 1970 280달러 → 1979 1,670달러 |
| | 도농간 소득격차 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평균소득 90% 증가: 1970 250만원 → 1970 2,250만원 ○ 도시가구 대비 농가 1인당 실질소득 증가: 1970 61.7% → 1974~1975 85% |
| | 지역간 균형발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마을* 증가: 1972 7% → 1977 2/3(67%) - 자립마을 10가지 요건: 간선도로 완성, 20m 미만 교량가설 완성, 지붕개량 80% 이상, 담장개량 80% 이상, 농경지 수리율 85% 이상, 마을 주변 작은 하천 정비, 회관·창고·작업장 중 둘 이상 구비, 마을 기금 100만원 이상 확보, 농외소득사업 개발 추진, 호당 소득 140원 이상 달성 * 출처: 여주시 2023(내무부 자료 인용) |
| | 농촌 자본형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 소득·저축 증대로 자본 형성 * 전기·전화 보급으로 생활 변화 및 농가 생산성 향상도 자본형성에 기여 |
| 사회개발 측면 | 농촌 인구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인구 조사망율 10% 감소: 1971 9.0명 → 1976 8.1명 ○ 복지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평균수명 증가 |

| | | |
|---------|--------------------|--|
| | 농촌 생산기반시설 확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지정리율 2배 증가: 1971 14.6% → 1976 25.3% ○ 소류지, 보, 도수로, 배수로 등 수리시설 완비 ○ 영농의 기계화로 농업생산량 향상 |
| | 주택·생활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 개량, 지붕개량, 담장개량, 마을 안길 확장, 하수구 개선, 소화천 정비 등 생활환경 개선 ○ 1971년 이후 농촌 초가지붕의 30%가 기와나 슬레이트로 개량 ○ 1981년 전기보급 완결 |
| | 교통·통신환경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안길진입로 개설로 차량(마을버스 등)을 활용한 외부활동 가능, 시장접근성 개선 ○ 라디오·TV 보급 확대로 농촌주민들의 정보 획득 및 문화생활 향상 |
| | 복지·생활수준 향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증대로 생활요용품 구입 증가 ○ 마을회관, 탁아소 등 마을단위 공동이용 복지시설 증가 ○ 병원·약국 보유 마을 비율 2배 증가: 1971 8.5% → 1976 18.4% |
| 정신계발 측면 | 합리적·생산적 생활태도 형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운동 정신 실천으로 주민들의 태도가 진취적·적극적·과학적으로 변화 ○ 농촌 주민에 대한 각종 교육으로 민주의식과 합리성 향상 |
| | 생활양식의 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진흥사업과 새마을부녀회의 영양개선 사업으로 단백질 섭취 증가 등 식생활 개선 ○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직접적 실천 |
| | 인간관계 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내 어려움과 문제점 해결을 위해 주민들간 다양한 의사소통 ○ 마을회의는 주민들의 소통의 장으로 역할 |
| | 거래관계 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간 생산품 거래에서 공동구판으로 전환, 유통구조나 거래관계가 효율적으로 변화 |

1970년부터 1979년까지 전개된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정부, 새마을지도자, 마을주민, 새마을지도자 연수원 등이 생산한 기록물 22,084건은 국제사회가 그 의미와 중요성을 인정하여 2013년 6월 18일에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유엔세계식량계획(United Nations World Food Programme: WFP),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ESCAP) 등은 새마을운동을 개발도상국을 위한 빈곤퇴치 모델로 채택하였으며 수 많은 저개발국가들이 새마을운동의 경험과 기술을 전수받아 각자의 환경에 맞게 적용하여 농촌진흥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많은 저개발국가들이 나름대로의 농촌개발 운동을 추진해왔으나 성공한 사례가 드문 상황에서,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세계적인 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새마을운동 성공 사례는 저개발국가들에게 호소력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새마을운동중앙회]. 이러한 점에서 저개발국가인 북한의 농촌에도 새마을운동과 유사한 농촌개발 모델이 적용될 수 있으며 남북협력이 이루어 질 경우 유사한 자연환경과 두레·계와 같은 전통적인 상부상조·근면정신 등을 공유하고 있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농촌 여권 신장> 새마을운동의 성과로 빈곤퇴치, 마을환경 개선, 정신개발, 농촌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지위 향상, 주민 리더십 개발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농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위 향상은 여성 인권 증진 측면에서 주의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저개발국가에서 농촌은 취약지역이며 농촌 여성은 농촌 주민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농촌 여성의 지위 향상은 인도적·인권적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농촌개발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특히 인도적·인권적 상황이 심각한 북한 농촌개발협력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새마을운동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및 지위향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선행연구[왕능욱, 2011][장준철, 2012]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참고하여 북한 농촌개발협력에 있어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미 새마을운동의 사회적 배경에서도 언급했듯이 1960년대 한국에서 진행된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이농으로 부족해진 농촌인력을 보충해야 했다. 농촌개발의 지속과 성공을 위해서는 이전까지 가정에 국한되었던 농촌 여성들의 역할도 가정 밖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커졌다. 당시 정부는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농촌 여성 인력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마을마다 부녀회를 조직하게 하고 부녀자를 대상으로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자를 선출하여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도록 하였으며, 행정기관과 부녀회를 연결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여성지도자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학습과 교육을 통해 의식을 개선하고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지역 여성 지도자들은 마을 여성들을 모으고 회의를 주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수렴된 의견과 여론을 상부기관에 전달하고 조정하는 역할도 하였다. 부녀회에서는 각종 마을공동사업을 추진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회원별로 배당하거나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 마을공동사업에 재투자하거나 마을공동시설 건립, 장학금 수여, 마을공부방 설치, 마을유아원 건립, 교육사업, 복지향상 사업에도 사용하였다. 소득증대 사업, 농촌복지향상, 생활환경 개선, 중고품 교환, 자원재활용, 불우이웃돕기, 위문사업 등도 추진하였다. 또한 공동구판장 운영을 통해 농촌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추구했다. 낮은 사회적 지위와 한정된 역할에 머물렀던 농촌 여성들은 새마을운동을 계기로 여성 조직의 활성화와 적극적 참여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활동이 크게 증가하였고 향상되었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및 지위향상이 되었지만 당시 정책의 목적이 여성 지위 향상 그 자체라기 보다는 새마을운동의 지속과 성공을 위해 부족한 농촌 인력의 보충을 위해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를 추진한 것은 아쉬운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적·인권적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북한을 포함한 저개발국가 농촌개발협력에 있어서 농촌 여성의 지위향상 그 자체를 목표로 두고 새마을운동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2.3.1.2. 오스트리아 농촌개발 사례

오스트리아는 국토 면적이 남북한 면적의 약 38%이며 2020년 기준

인구는 남북한 인구의 약 12%이다[통계청][World Bank]. 오스트리아는 남북한과 유사하게 국토의 약 2/3가 산지일 정도로 평지와 농지가 적다. 표-10에서 보듯이, 오스트리아는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로 남한(1.9%)과 유사하며 북한(22.4%) 보다는 훨씬 낮다. 이렇듯 오스트리아는 농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기준 농가당 GDP는 1인당 GDP의 93.9%(4만 4,737달러)에 달할 정도로 높으며[이현근 2017], 2020년 기준 농촌인구는 전체 인구의 41%로 남한(19%)의 두배가 넘으며 북한(22.4%) 보다는 약간 높다.

표-10. 남북한 및 오스트리아 농촌 관련 지표 비교(2020년 기준).

| 구 분 | 오스트리아 | 북한 | 남한 |
|---|-----------------------|------------------------|-----------------------|
| 국토면적(Land area) ¹⁾ | 82,520km ² | 120,410km ² | 97,600km ² |
| 산림면적 비율(Forest area, % of land area) ²⁾ | 47.3% | 50.1% | 64.4% |
| 농업면적 비율(Agricultural land, % of land area) ²⁾ | 32.1% | 21.5% | 16.6% |
| 경지면적 비율(Arable land, % of land area) ²⁾ | 16.0% | 18.9% | 13.9% |
| 농림어업 GDP 비중 ¹⁾ | 1.1% | 22.4% | 1.9% |
| 인구 ²⁾ | 892만명 | 2,587만명 | 5,184만명 |
| 농촌인구(Rural population, % of total population) ²⁾ | 41% | 38% | 19% |

1) 출처: 통계청 2) 출처: 세계은행

오스트리아는 다음과 같은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을 따르고 있으며 농촌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보조금 등 정부의 지원정책을 통해 식량생산·가공산업·관광·전통문화·환경보존 등의 기능을 한다[이현근]. 요약하면 농촌은 식량안보, 생물다양성 및 문화경관 보존, 농촌인구 유지 등의 기능을 하고 정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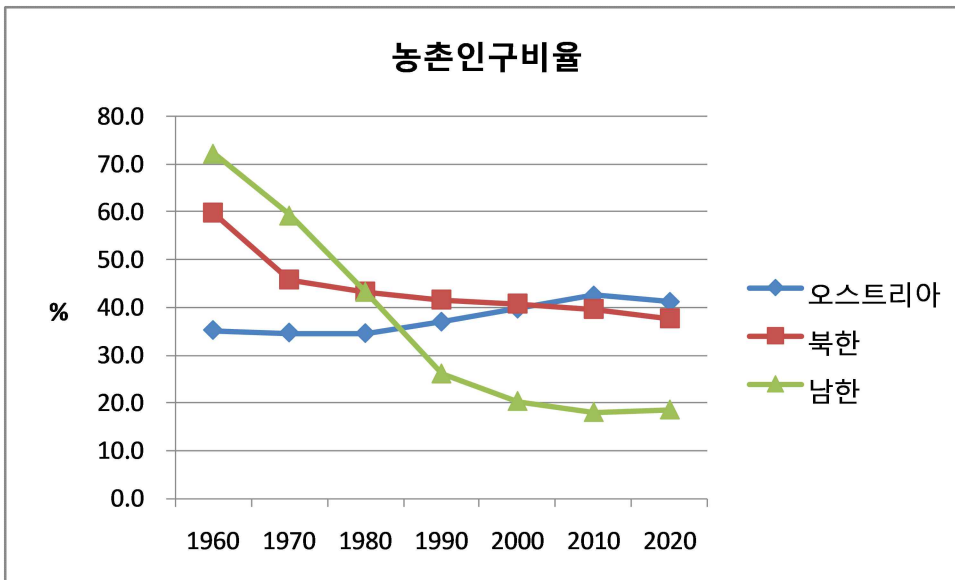
이에 대한 대가로 농민들에게 생계에 걱정이 없을 정도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EU 공동농업정책(CAP) 방향

- 실행 가능한 경제적인 방법으로 농가단위의 온전한 농촌 환경 유지
- 농업과 타산업의 결합을 통한 여러 가지 소득원 창출과 고용 증진
- 시장 지향적인 생산, 가공과 유통의 증진
- 다른 경제주체와 비교한 근본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균형을 맞추고, 양질의 식품, 원료농산물, 자연자원 등의 공급을 최적화하고, 문화와 관광적 형상을 유지하고,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

그림-11에서 보듯이 농촌인구의 변화 추이를 보면, 남한은 도시화에 따라 농촌인구가 급격하고 감소했으며 북한도 남한 보다는 높지만 농촌인구가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 다른 유럽 선진국들도 농촌인구가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인 반면, 오스트리아는 최근 약간 감소하긴 했으나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림-11. 남북한 및 오스트리아 농촌인구비율 변화 추이(1960~2020).



1) 출처: 세계은행

이것은 오스트리아 농촌이 도시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복지·인권이 보장된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세계은행 통계[World Bank]에 따르면, 농촌 주민의 전기 접근 비율(Access to electricity) 100%(북한은 67.2%), 농촌 주민의 조리용 청정 연료·기술 접근 비율(Access to clean fuels and technologies for cooking)이 100%(북한은 1%), 농촌 주민의 안전관리 위생시설 사용(using safely managed sanitation services) 비율이 99%(북한은 1%)이다. 오스트리아 농촌은 전기·교통·통신·도로·상하수도·냉난방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으며 자연경관과 지역문화와 조화롭게 개발되어 농촌 주민들은 인도적·인권적 측면에서 충분히 보장된 생활을 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같은 선진국의 농촌이 북한과 같은 개도국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는 있으나 그 격차가 너무 커서 현실적인 목표가 되기에는 무리인 것이 사실이다. 오스트리아 농촌은 남한 정도의 수준의 국가에서 벤치마킹하고 추구해야 할 대상으로 적당하다. 따라서 생활환경이 잘 갖춰진 오스트리아 농촌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도주의적·인권적 관점에서 북한 농촌개발의 장기적인 개발방향을 이해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오스트리아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유럽 평균(60%) 보다 높은 75%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추진중이다[외교부].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총 에너지 생산량중 재생에너지 비율은 30%로 EU 평균(14.3%)의 두배에 달하며(역내 5위), 총 전력 생산량중 재생에너지 비율은 약 80%로 1위이다. 구체적으로는 수력 60%, 풍력 10%, 바이오에너지 6%, 태양광 2.3%, 화석연료 20%이다. 또한 원전금지법을 제정(1999년)하여 원자력 발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는 오스트리아의 정책 추진의 효과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섬마을이나 외딴 농촌 마을과 같이 외부로부터 충분한 전기를 공급받기 어려운 환경에서 ‘에너지 자립 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는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에너지 자립 마을(Energy-self-sufficient district)인 귀싱(Güssing)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다. 귀싱은 1980년 후반까지 산업의 부재, 높은 실업률, 열악한 교통

인프라, 소규모 구조화 농업, 높은 외부로의 통근자 비율(70%), 높은 인구 유출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인식되었다[POCACITO]. 1990년에 귀싱은 문제 해결 및 지역 발전을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100% 에너지 자립을 실행하기로 결정하였다[COOLHEATING]. 약 15년후 귀싱은 지역의 주택, 공공건물 및 산업이 필요로 하는 전기의 두 배를 생산하게 되었으며 열 수요의 85%를 감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공은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재생 자원(목재, 바이오매스, 태양)을 활용한 지역의 에너지 생산을 통해 가능했다. 다시 말해서 주변이 산림지역이라서 얻기 쉬운 풍부한 목재, 태양광·열, 가축분뇨 등을 이용해 석유·석탄을 대신해 전기와 열을 자급 자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수요를 초과하는 잉여 전기는 외부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였다. 바이오매스 시설, 지역 난방 시설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들의 건립은 관련 분야의 국내외 연구 기관들은 물론 많은 기업들을 불러들였다. 점차 귀싱은 에너지 자립 성공사례가 되어 갔을 뿐만 아니라 재생 에너지 기술 연구와 생태 관광에 대한 네트워크가 되었다. 지역에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 경험을 배우기 위해 찾고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마을이 되었다. 최초로 유럽연합에서 에너지 100% 자립을 이룬 마을로 유명해졌으며 귀싱 모델은 점차 인근 지역과 전세계로 전파·확산되고 있다.

비엔나대학교 연구팀과 함께 귀싱 마을에 위치한 귀싱에너지기술 회사(Güssing Energy Technologies: GET)를 방문하여 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 회사 관계자는 에너지 인프라는 구축과 유지·보수·교육 등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에 작은 단위로 구축하는 분산화(Decentralization)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향후 북한 농촌개발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시설이 필요하다. 이것은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 의지와 경제적 능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이 각 지방의 에너지 자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지라도 능력의 한계로 인해 이를 실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하게 하고 북한이 할 수 없는 것은 외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현지 조사를 통해 북한 농촌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종류가 무엇인지를 찾을 필요가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성공적인 요소라고 해도 여건이 다른 북한에 바로 적용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땀감(연료)이 부족하여 산림 훼손이 심한 북한에서는 목재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은 어려울 것이며, 비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료 공급 없이는 비료로 쓰이는 가축이나 사람의 분뇨를 이용한 바이오매스 발전도 어렵다. 그러나 지열이나, 태양열(광), 풍력 등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은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외부와 협력을 통해 북한 농촌의 지역별 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역에 맞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 자립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농촌환경 조사는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북한 농촌개발협력 세부사업이다.

오스트리아는 남북한 동시 수교국(남한 1892년, 북한 1974년)이며 오스트리아에는 남북한 모두 대사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는 북한 대사를 겸임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여건이 되면 북한 농촌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에 있어 오스트리아의 상당한 역할과 지지를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남북 합동 오스트리아 농촌 현장시찰, 농촌개발 관련 경험·기술 공유, 농촌마을 자매결연·상호교류, 북한농촌개발 참여 등을 모색·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3.2. 농촌개발과 인도·인권적 요소

2.3.2.1.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인권의 연계성

‘지속가능’이란 사전적 정의는 “자연 자원의 고갈을 피하면서 생물학적 균형을 보존하는 것”[Oxford], “고갈이나 파괴 없이 사용될 수 있는”[Webster]이다. ‘지속가능발전’이란 용어는 1978년 ‘유엔 환경과 개발을 위한 세계위원회’에서 발표한 ‘우리의 공동 미래’라는 보고서(위원

장인 노르웨이 수상 Brundtland를 따서 ‘브룬트란트 보고서’로 널리 알려짐)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우리 자신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미래 세대의 능력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수요를 충족하는 발전”으로 정의되었다[Lichtfouse et al. 2009].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은 이미 1987년 이전부터 있었는데, 이러한 개념이 생겨난 것은 지구의 자원은 한계가 있어 환경을 파괴하는 생활방식과 발전방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KoFID. 2016].

오랜기간 수많은 논의를 거쳐 2015년 9월 25일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2030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SDGs 2030 의제)’가 채택되었으며,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란 여기에 규정된 17개 목표(goal)와 169개 세부목표(target)를 말한다[UN. 2015].

SDGs는 ‘아무도 소외 받지 않는다(Leave No One Behind)’라는 기본 원칙 아래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포용적 국제개발협력 아젠다’이다. 유엔은 ‘SDGs 2030 의제’에서 “모든 인권의 실현을 추구한다(seek to realize the human rights of all)”,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1948), 국제인권협약, 발전권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UNDRTD, 1986) 등에 근거한다”라고 언급하며 SDGs의 주요 원칙이 인권 보호와 증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UN 2015].

인권은 모든 사람이 천부적으로 갖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인권의 내용은 2차 세계대전 전후로 만연한 인권침해에 대한 인류의 반성을 바탕으로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에 관한 세계 선언문(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되어 있으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이하 자유권)’를 중심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이하 사회권)’를 규정하고 있

다[UN]. 이후 유엔은 전 세계적으로 법률적 효력이 있는 국가간 의무가 있는 조약의 형태로 자유권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1966), 사회권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1966)을 마련하였다. 이후에 향후 발전권선언 등을 통해 인권의 개념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사실 편의상 구분일 뿐이다. ‘보편성(누구나)’, ‘불가분성(모든 권리가 보장돼야 인정)’, ‘상호의존성(긴밀히 연계)’이라는 인권의 특성상 자유권과 사회권 등 인권은 긴밀하게 연계되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다시 말해 분리되기 어려우며 어느 하나가 보장되지 않으면 나머지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간답게 살 권리는 어느 하나의 권리가 빠져서는 성립될 수 없으며 어느 하나의 기본적인 인권도 소중하고 필수적이다. 인권 자체에 대한 많은 이론과 연구가 있다. 본 보고서는 연구과제 성격과 분량을 감안하여 인권 자체를 자세히 다루지 않으며 개발협력과 인도·인권적 연관성(또는 연결성, 연계성)에 대해 초점을 둔다.

SDGs와 인권의 연관성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있다[DIHR][이성훈 2017][URG 2017][김수진 2018]. 덴마크인권연구소(DIHR)는 SDGs 세부 목표와 연관된 국제인권기준을 조사해서 나열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김수진(2018)은 이러한 DIHR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SDGs의 세부목표의 98.8%가 인권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성훈(2017)은 SDGs와 인권의 연관성을 제시하면서 표-11과 같이 덴마크인권연구소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세부목표가 아닌 목표 차원에서 자주 언급되는 국제인권규범을 예시하였다. 이성훈(2017)은 SDGs 1~15번 목표는 사회권(3번은 건강권, 4번은 교육권, 6번은 물에 대한 권리), 16번 목표는 자유권, 17번 목표는 발전권, 국제연대, 민주적 국제질서, 인권지표 등과 연계되어 있다고 분석하였다. URG(2017)는 SDGs는 발전권 뿐만 아니라 경제권, 사회권, 문화권 등 모든 형태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일종의 행동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김수진 2018].

| 핵심 단어 | SDGs 목표 | 국제인권기준(예시) |
|-------|--|---|
| 빈곤 | 목표 1. 모든 형태의 빈곤을 모든 지역에서 종식시킨다 | 세계인권선언 22, 25, 사회권 규약 |
| 기아 | 목표 2. 기아를 종식하고, 식량 안보를 확보하며 영양상태를 개선하며 지속가능 농업을 증진한다. | 세계인권선언 25, 28 사회권 규약 (ICESCR) |
| 건강 | 목표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well-being)을 증진한다. | 세계인권선언 3, 25, 27, 28 사회권 규약 |
| 교육 | 목표 4.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한다. | 세계인권선언 26, 28 사회권 규약 |
| 성평등 | 목표 5. 성평등 달성 및 여성, 여아의 역량을 강화한다 | 세계인권선언 2 사회권 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아동권리협약(CRC) |
| 물 | 목표 6. 모든 사람을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권리를 확립한다. | 세계인권선언 2 사회권 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아동권리협약(CRC) |
| 에너지 | 목표 7. 모든 사람을 위한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에의 접근을 확립한다. | 세계인권선언 25, 27 사회권 규약 |
| 일자리 | 목표 8. 지속적, 포괄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생산적인 완전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한다. | 세계인권선언 4, 사회권 규약 ILO 핵심노동기준 |
| 산업화 | 목표 9. 복원력이 있는 인프라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진흥시키며 혁신을 장려한다. | 세계인권선언 19, 25, 27 사회권 규약 |
| 불평등 | 목표 10.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을 완화한다. | 세계인권선언 2, 21, 22 사회권 규약 발전권 선언 |
| 도시 |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거주지를 조성한다. | 세계인권선언 25, 사회권 규약 UN HABITAT 신도시의제 |

| | | |
|------|--|--|
| | | (New Urban Agenda, NUA) |
| 생산소비 |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을 확립한다 | 세계인권선언 25(1) 사회권 규약 |
| 기후변화 |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는 긴급 행동을 시행한다 | 세계인권선언 25(1) 사회권 규약 UN 기후변화협약 (UNFCCC) |
| 해양 | 목표 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 바다, 해양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사용한다. | 세계인권선언 25(1), 사회권 규약 |
| 육상 | 목표 15. 육상 생태계를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 하며, 사막화를 방지하고, 토지 황폐화를 막고 생물 다양성 감소를 억제한다. | 세계인권선언 25(1) 사회권 규약 |
| 거버넌스 |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건설하고, 사법 정의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며,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한다. | 세계인권선언 3, 5, 6, 8, 19, 21 자유권 규약 (ICCPR) 아동권리협약(CRC) 고문방지협약 (CAT) 인종차별철폐협약(ICERD) 장애인권리협약 (CRPD) 부패방지협약(UNCAC) |
| 이행수단 | 목표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한다. | 세계인권선언 12, 27(1), 28 발전권 선언 |

표-11. SDGs와 국제인권기준 연계.

유엔내 인권활동 증진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는 SDGs를 인권과 통합된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인권과 지속가능발전은 불가분하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 강화될 수 있는 관계에 놓여 있으므로 두 영역을 하나

로 연계함으로써 SDGs를 통해 인권실현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SDGs와 14개 국제인권기구와 연계하였다[OHCHR 2023]. 연계된 국제인권기구는 세계인권선언(UDHR), 인종차별철폐협약(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일명 자유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일명 사회권),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고문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CAT), 발전권선언(UNDRTD),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이주노동자보호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CMW), 여성폭력철폐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DEVAW),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OP-1),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강제실종방지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ICPEP), 원주민권리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UNDRIP)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OHCHR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편의상 국제인권기구명은 생략하고 SDGs와 연계된 인권을 중심으로 표-12에 정리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문 번역은 국내 민간단체의 자료를 참고하였다[NKSDG].

표-12. OHCHR의 SDGs와 인권 연계.

| 핵심 단어 | SDGs 목표 | 연계된 인권 |
|-------|--------------------------------|--|
| 빈곤퇴치 | 목표 1. 모든 형태의 빈곤을 모든 지역에서 종식시킨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 사회보장권 ○ 여성의 동등한 경제 생활의 권리 |
| 기아종식 | 목표 2. 기아를 종식하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음식에 대한 권리 |

| | | |
|---------------|--|---|
| | 식량 안보를 확보하며 영양 상태를 개선하며 지속가능 농업을 증진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식량 공급의 공평한 분배를 포함한 국제협력 |
| 건강과 웰빙 | 목표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wellbeing)을 증진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권 ○ 건강권 ○ 엄마와 아이를 위한 특별 보호 ○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 국제협력 |
| 양질의 교육 | 목표 4.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 교육 기회를 증진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권 ○ 교육 분야에서 여성과 소녀의 동등한 권리 ○ 기술 및 직업 훈련을 포함한 일할 권리 |
| 성평등 | 목표 5. 성평등 달성 및 여성, 여아의 역량을 강화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 ○ 자녀의 수 및 출산간격을 결정할 권리 ○ 엄마와 아이를 위한 특별 보호 ○ 여성 및 소녀에 대한 폭력 철폐 ○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의 권리 |
| 깨끗한 물과 위생 | 목표 6. 모든 사람을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확립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식수 및 위생에 대한 권리 ○ 건강권 ○ 농촌 여성의 물과 위생에 대한 동등한 접근 |
| 모두를 위한 청정 에너지 | 목표 7. 모든 사람을 위한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에의 접근을 확립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 ○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
|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 목표 8. 지속적, 포괄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생산적인 완전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의 권리 ○ 국제노동기구 핵심 노동협약 및 기본 원칙과 노동권에 관한 선언(ILO) ○ 노예제, 강제 노동, 인신매매 금지 ○ 고용과 관련된 여성의 동등한 권리 ○ 아동 노동의 금지 ○ 국제노동기구 협약 182호 (ILO) ○ 이주 노동자의 동등한 노동권 |

| | | |
|----------------|---|--|
| 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 | 목표 9. 복원력이 있는 인프라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진흥시키며 혁신을 장려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 정보접근권 ○ 토지와 자원을 포함한 적절한 주택에 대한 권리 ○ 여성의 경제적 신용 및 시골지역 인프라에 대한 동등한 권리 |
| 불평등 감소 | 목표 10. 국가내, 국가간 불평등을 완화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등과 비차별에 대한 권리 ○ 공무에 참여할 권리 ○ 사회보장에대한 권리 ○ 국제이주 조건 향상 ○ 이주민의 수입과 저축을 송금할 권리 |
|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거주지를 조성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와 자원을 포함한 적절한 주택에 대한 권리 ○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 교통, 시설 및 서비스의 접근성 ○ 자연 재해로부터의 보호 |
|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을 확립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권, 청결권, 건강하고 지속적인 환경권을 비롯한 건강권 ○ 적절한 음식과 안전한 식수에 대한 권리 ○ 천연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 |
| 기후변화 대응 |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는 긴급행동을 시행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권, 청결권, 건강하고 지속적인 환경권을 비롯한 건강권 ○ 적절한 음식과 안전한 식수에 대한 권리 ○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 |
| 해양생태계 보존 | 목표 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 바다, 해양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사용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권, 청결권, 건강하고 지속적인 환경권을 비롯한 건강권 ○ 적절한 음식과 안전한 식수에 대한 권리 ○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 |
| 육상생태계 보존 | 목표 15. 육상 생태계를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 하며, 사막화를 방지하고, 토지 황폐화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권, 청결권, 건강하고 지속적인 환경권을 비롯한 건강권 ○ 적절한 음식과 안전한 식수에 대한 권리 ○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 |

| | | |
|----------------|--|--|
| | 막고 생물 다양성 감소를 억제한다. | |
| 정의, 평화, 효과적 제도 |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건설하고, 사법 정의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며,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할 권리 ○ 고문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모든 형태의 폭력, 학대 및 착취로부터의 아동 보호 ○ 인신매매로부터 아동 보호 ○ 정의와 적법 절차에 대한 접근권 ○ 법적으로 인정 받을 권리 ○ 공무참여권 ○ 정보에 접근할 권리 |
| 지구촌 협력 | 목표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결정권 ○ 발전 및 국제협력의 권리 ○ 과학 분야의 국제 협력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 프라이버시 권리 |

2.3.2.2. 북한의 SDGs에 대한 입장

북한은 유엔과 ‘UN전략계획 2011-2015’을 채택한 데 이어 북한 내 부환경을 고려한 SDGs 관련 국제사회와 협력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UN전략계획 2017-2021’을 2016년 채택하였다[문경연. 2019].

‘UN전략계획 2017-2021’ 사업 원칙(접근법)

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적용
2. 인권기반접근법(Human Rights-Based Approach: HRBA) 채택
3. 성평등과 여성권리 강화(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지원
4. 환경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추구
5. 제도의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and Institutional Sustainability) 추구
6. 성과기반 관리(Result-based Management: RBM) 적용
7. 복원력(Resilience) 강화

북한은 국제사회가 2015년 9월에 유엔의 ‘SDGs 2030 의제’를 채택 하자 이를 수용하고 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약속하였다. 2016년 4월에 열린 유엔의 SDGs 달성을 위한 고위급회의에서 북한 리수용 외무상은 “국제 차원에서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을 제거하고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인간의 존엄성과 창의력, 풍요로운 삶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려는 국제사회의 행동 프로그램이며...지속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세계적인 노력에 적극 합류해 나갈 것을 확인한다”고 언급하였다. 이후에도 북한은 2019년 10월에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동북아 SDGs 이해관계자포럼’에 참석하여 SDGs 이행현황과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21년 7월 뉴욕에서 개최된 SDGs 달성을 위한 고위급회의에서 SDGs 이행 자발적국가검토(VNR: Voluntary National Review)[DPRK. 2021]를 발표하면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추진 과정에서 모든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자발적국가검토(VNR)는 SDGs를 이행하는 회원국들이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SDGs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북한이 VNR을 제출하고 발표한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으로서 SDGs를 수용하고 실질적으로 이행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 보고서라고 볼 수 있다[최규빈. 2022]. 최규빈(2022)이 언급했듯이 이러한 북한의 SDGs VNR 참여는 국제개발협력 규범과 관련하여 다년간 국제사회와 교류와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으며 SDGs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적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적 목표와 연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VNR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북한은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이 주관하는 지속가능발전국가기획팀을 2018년 8월에 발족하고 그 아래 △사회인구 △과학교육 △공중보건·식수위생 △경제·에너지 △환경·생태계 △재난위기관리 등 6개 기술위원회 설치 등 SDGs 이행체계를 공식화하였다. 북한은 SDGs를 자신들의 현실과 글로벌 지표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17개 목표와 95개 세부목표를 선별하고 132개의 지표를 우선순위와 함께 제시하였다. SDGs 세부목표의 53%가 북한식으로 수용되었다[최규빈 2022].

한국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여 국제기구인 UNESCAP을 통해 통계 작성 및 보고서 작성 등 북한의 SDGs 이행을 지원하였다[통일부 2020]. 북한의 VNR에 서술된 각종 통계 수치들은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것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고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통계를 잘 공개하지 않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자발적으로 작성하고 제출한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VNR에 공개된 북한 주민의 인도주의·인권과 관련된 주요 통계는 표-13과 같다.

표-13. SDGs 자발적국가검토(VNR)의 경제사회 주요 지표.

| 구분 | 단위 | 北 VNR | | |
|---|----|-----------|------------|------------|
| | | 2015 | 2018 | 2020 |
| 목표 1. 민생 개선 | | | | |
| 1.2.1 현대적 개조된 고아들의 소학교, 탁아소, 고아원, 쉼터의 수 | 개 | 29 | - | 67 |
| 목표 2. 지속 가능한 농업 및 식량 자급자족 | | | | |
| 2.1.1. 식량부족 | 천톤 | 1,147 | 1,486 | - |
| 목표 3. 건강 및 복지 증진 | | | | |
| 3.1.1. 모성 사망률(출산 10만명당) | 명 | 58 | 50.4 | 49(2019) |
| 3.2.1. 5세 미만 사망률(출산 1천명당) | 명 | 17.7 | 16.9 | 16.8(2019) |
| 3.3.2. 결핵 발병률(인구 10만명당) | 명 | 451 | 354 | 351 |
| 3.3.3. 말라리아 발병률(인구 1천명당) | 명 | 0.52 | 0.29 | 0.15 |
| 3.3.4. B형간염 발병률(인구 10만명당) | 명 | 6.8 | 6.4 | 5.9 |
| 3.a.1. 15세 이상 인구 중 흡연 연령 표준화 현황 | % | 46.3 | 46.1(2017) | - |
| 3.c.2. 공공 보건 부문에 대한 정부 지출의 비중 | % | 6.4(2014) | 7(2017) | - |
| 목표 5. 양성평등과 여성 권리 확립 | | | | |
| 5.5.1. 여성 비율 | % | | | |
| 최고인민회의 | | 20.2 | - | 17.6(2019) |
| 도인민위원회 | | 27 | - | - |
| 5.b.1. 15~49세 인구 중 휴대전화 보유 비율 | % | | (2017) | |

| 구분 | 단위 | 北 VNR | | |
|--|-----------|--|---------------------------|--------------------------|
| | | 2015 | 2018 | 2020 |
| 남성 | | - | 55.7 | - |
| 여성 | | - | 47.9 | - |
| 목표 6. 식수위생 및 지속가능한 이용 보장 | | | | |
| 6.1.1. 안전 관리 식수 이용 비율 | % | - | 60.9 (2017) | - |
| 6.2.1. 안전 관리 위생시설 이용 비율 | % | - | 47.5 (2017) | - |
| 목표 7.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체계 확립 | | | | |
| 7.1.1. 전기 사용 인구 비율 | % | 36.6 | 36 | 34.6(2019) |
| 7.2.1. 최종 에너지 소비의 재생에너지 비중 | % | 14.5(2015) 12.1(2016) | 9.3 | 11.4(2019) 10.8(2020) |
| 7.3.1. 1차 에너지와 GDP로 측정된 에너지 집약도 | GJ/ 천불 | 35 | 31.5 | 28.7 |
| 목표 10. 인민의 지위 및 역할 강화 | | | | |
| 10.2.1. 국내법의 채택, 국제협약 가입 | | 장애인보호법(2003), 아동권리보호법(2010), 여성권리증진법(2010) 등 | | |
| 목표 11. 풍요롭고 문명화된 삶·생활 보장 | | | | |
| 11.a.1. 도시 거주 인구 비율 | % | 61 | 62.3(2019) | - |
| 목표 12. 지속가능 소비·생산 보장 | | | | |
| 산업·생활 폐기물 재사용 및 재활용 | | · 재활용 수준 낮음 | | |
| 목표 13. 기후변화 대응 | | | | |
| 13.2.1 국가 온실가스배출계획 격년 갱신 보고서 제출 건수 | | 두번째 보고서 (2012) | 첫번째 보고서 FNDC (2016) | NDC 업데이트 (2021) |
| 목표 14. 해양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용 | | | | |
| 14.5.1. 해양지역과 관련된 보호지역의 적용 범위 | % | 0.7(2016) | - | - |
| 목표 15.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및 생태계·생물다양성 유지 | | | | |
| 15.1.1. 총 토지면적 대비 산림면적 | % | 67.3 | 69.9 | 73.6 |
| 15.2.1.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 | | | |

| 구분 | 단위 | 北 VNR | | |
|----------------------------------|--------------------|---------------------------------------|----------------|----------------|
| | | 2015 | 2018 | 2020 |
| 연간 산림지역 증가율 | % | | 1.3(2015~2018) | 1.7(2015~2020) |
| 헥타르당 산림 축적량 | m ³ /ha | 46 | 44 | 44 |
| 15.3.1. 총 토지면적 대비 황폐화된 토지 비중 | % | 9.7 | 8.1 | 7.2(2019) |
| 목표 17. 우호적인 파트너십 개발 | | | | |
| 17.6.1. 국가 간 과학기술 협력 협정 및 프로그램 수 | 건 | 9 | 7 | 8(2019) |
| 15~49세 여성 인터넷 접속률 | % | 지난 3개월간 5.2% 접속, 3.7%는 1주일에 1회 이상 접속 | | |
| 15~49세 남성 인터넷 접속률 | % | 지난 3개월간 11.6% 접속, 7.9%가 1주일에 1회 이상 접속 | | |

북한은 인권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을 보여왔지만 인권과 연계된 개발 협력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협력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SDGs에 대해서는 북한 체제 특성상 국제사회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행에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또 이행에 관한 자발적국가보고서(VNR)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과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북한 농촌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인권과 긴밀히 연계된 SDGs는 북한 농촌개발의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북한 농촌개발에서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은 국제인권조약에 자발적으로 서명·비준했고, 유엔에 인권 관련 정기보고서를 제출한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도 적극 참여했다. 글로벌 인권 플랫폼에 북한이 개방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최대한 활용해 북한과 소통해야 한다”(연합뉴스, 2023.3.24.)고 언급한 것은 북한이 수용하는 국제적 인권(연계) 프레임을 잘 활용하여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인권적 상황을 개선하는 통합적 접근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4. 인도·인권적 접근 연계 북한 농촌개발 방향

이번 절에서는 먼저 일반적인 개도국 농촌개발협력은 어떠한 범주와 세부사업이 있는지 살펴보고,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SDGs와 연계한 개도국 농촌개발협력 추진방향에 대해 짚어 본다. 이후 인도적·인권적 측면에서 시급한 북한 개발협력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2.4.1. 개도국 농촌개발협력 범주 및 SDGs 연계 추진방향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 농촌개발 국제협력사업의 범주 및 세부사업은 농촌개발 사례를 일반화하여 얻어질 수 있으며, 표-14와 같이 소득증대, 농업생산기반 개선, 주거환경 개선, 기초수요, 조직화 및 역량 개발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허장 외 2013].

표-14. 농촌개발협력 범주 및 사업 표준목록.

| 범주 | 세부 범주 | 세부사업 |
|-----------|--------|--|
| 소득증대 | 농업 소득 | ○ 농업생산성(식량작물, 경제작물) 제고(증산), 퇴비증산, 농산물 가공(정미, 제분, 유가공 등 포함), 시설농업 설치 및 관리, 마을양묘·조림(연료대책 포함), 임산자원 개발, 가축질병 관리 및 장비, 가축사육 및 관리(인공수정, 우량종 보급 포함), (공동)축사, 농업(소)금융, 시범포, 농업기술 연구개발, 종자보급, 영농교육 및 시설, 공동판매장 |
| | 비농업 소득 | ○ 제조업(농촌공장), 관광, 직업훈련시설 |
| 생산 인프라 | 생산 인프라 | ○ 영농기계화, 농기구 보급, 경지정리, 농지조성, 수자원(보, 저류지, 관정 등) 개발 및 관리, 관개·배수 시스템 설치 및 관리, 공동집하·선별장, 농산물 (저온) 저장창고, 농로 |
| 마을 및 주거환경 | 마을 인프라 | ○ 마을(마을간, 마을안) 도로, 교량, 전기, 유·무선통신, 교통(공용주차장 포함), 상하수도, 재해대비(옹벽, 펜스, 사방 등), 마을정비(마을조경, 취락정비 등), 마을경관(마을숲 조성, 경관수목 식재 등), 마을회관(다목적 회관), 마을공동 화장실, 공동 빨래터, 오폐수·폐기물 처리시설 |

| | | |
|-------------|----------|---|
| | 주거 환경 | ○ 부엌 개량, 지붕 개량, 담장 정비, 주택 개량 및 신축, 취사·냉난방 에너지원, 가내 화장실 개량 |
| | 복지 | ○ 문화시설(공연장 등), 운동휴양(체육공원 등), 건강관리 시설, 구판장, 기타 복지시설 및 관리 |
| 기초 수요 | 보건·위생·의료 | ○ 식수 개발 및 관리(우물, 간이시설 포함), 보건소, 병·의원 등 의료기관, 이동식 병원, 약국, 조산원, 가족계획 장비 |
| | 학교 교육 | ○ 학교 시설 및 장비(영유아 포함), 교사 사택 |
| 조직화 및 역량 개발 | 사회조직 | ○ (마을개발 관련) 주민조직 형성 및 활성화, (농업생산성 관련) 협동조합 등 조직화 |
| | 역량개발 | ○ 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 마을지도자 양성, 국내외 선진지역 견학 |
| 기타 | | ○ 연구·조사, 계획 수립, 마을 홍보 |

김경량 등은 SDGs 채택 이후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 추진시 SDGs를 고려하여 개도국 농촌 개발협력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김경량 외 2015].

- ① 생활 공간으로서 농촌 개발: 농촌주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의료, 복지, 교육, 문화 등)와 사회간접자본(주택, 도로, 상하수도, 교통, 정보, 통신 등) 충분히 공급
- ②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공간으로서 농촌 개발: △농촌 인구 유지 △저렴한 식량 공급 기지에서 다원적 기능 강화로 전환 △친환경 및 지속가능 농업으로 전환 농촌지역 경제활동 다각화 △농민의 겸업 확대 및 비농민 경제활동 활성화(농산물 가공 및 판매, 중소기업 창업, 전통수공업 및 농촌관광 활성화)
- ③ 편의·휴식(Amenity) 공간으로서 농촌 개발: △단순한 생산 공간을 넘어 레저와 휴식 공간으로 성장 △농촌 환경 및 경관 회복·보전

△전통건축물, 문학, 예술, 축제, 식문화 등 유무형의 전통문화 유산 및 지역특성 보전

- ④ 농촌 주민에 의한 주체적·자율적 추진: △외부 의존적 추진 지양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 및 훈련기회를 확대하여 주민 역량을 강화
△농촌 주민 스스로 문제 파악 및 해결 유도'

위에서 제시된 개도국 농촌개발협력 추진방향은 '모든 인권의 실현을 추구'하고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주요 원칙으로 하는 SDGs를 연계한 것이다. 이는 농촌 개발을 단지 경제 발전을 위한 것으로만 보지 않고 인권 증진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의 한 부분으로 보기 때문이다. 사실 인권은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 때문에 인권의 요소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제시된 4개의 추진방향들은 인도·인권적인 측면에서 보면 농촌 주민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하고, 충분한 교육을 받고 발전하며, 문화적 생활을 영위하고, 휴식을 취하고 자기와 관련된 것들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4.2. 인도·인권적 관점에서 시급한 북한 농촌개발협력 추진방향

본 절에서는 인도주의·인권적 관점에서 북한 농촌개발협력에 대한 우선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시설 설치 및 건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들은 전문가들의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앞에서 제시된 농촌개발 요소(시설)들이 충분히 실현될 경우에는 별 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투입할 수 있는 자원·재원·시간 등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농촌개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개발사업이 분산되어 성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선택과 집중, 선후관계를 우선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지 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외부의 지원으로만 농촌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능력을 넘어서는 부분은 외부의 지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면서 지속가능하다. 이것은 북한이 즐겨 말하는 유무상통(有無相通)의 원칙이기도 하다. 북한과 같이 1990년대 이후 만성적 경제난에다 최근의 대북제재 강화 및 코로나19 국경봉쇄 등으로 자원·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농촌개발 요소들이 제대로 구현되기 어렵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외관상 그럴듯하게 보이는 보여주기식 일부 성과는 있겠지만 인도·인권적 상황 개선은 미진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제약을 전제로 앞에서 언급한 4가지 추진방향을 기본으로 하되, 인도적·인권적 측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추진방향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 주민들의 인도·인권적 상황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북한 농촌개발협력: △북한 농촌 주민들의 건강권, 생명권 등 인도주의·인권적 상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시설) 우선 협력·지원 △북한(또는 지역, 주민)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여 주민들의 인도·인권적 상황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농촌개발협력 요소(시설) 우선 협력·지원

이러한 추진방향은 그간 SDGs와 같은 개발협력 아젠다가 인권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개발협력 그 자체가 강조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한계에서 출발한다. 즉, 인도·인권적 상황 개선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다.

상기 추진방향에서 언급되는 요소(시설)들은 대개 북한 농촌주민들의 인도·인권적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로서 북한이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자원·기술 부족 등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며 농

촌주민들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인권 보장에 필수적이고 시급한 것들이다.

여기서 인도·인권적 측면에서 시급한 사업을 선별하여 북한농촌개발협력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들을 표-15와 같이 제안한다. 표-15에 나와 있지 않은 요소(사업)들이 인도·인권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농촌개발 요소가 인권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예를 들어 농촌개발협력 사업과 SDGs에서 언급된 인권과의 연관성을 보면, 소득증대 및 생산 인프라는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사회보장권, 여성의 동등한 경제생활의 권리와 적절한 음식에 대한 권리와 연관되어 있으며, 마을 인프라에서 마을 도로·교량은 이동권, 전기·통신은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및 통신권과 연관되어 있으며, 문화시설·체육시설 등은 문화권, 상하수도·화장실·오폐수처리시설·난방에너지원은 건강권·안전권·청결권과 적절한 식수에 대한 권리 등과 연관되어 있으며, 재해 대비 시설은 환경권과 생명권과 연관되어 있으며, 병의원·약국·조산원 등은 건강권·모자특별보호, 학교·유치원·탁아소 등은 교육권·여성동등권리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발협력 사업들은 인권과 단순하게 일대일로 연결되어 있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인권과 중복적·복합적(다대다)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민들의 인도·인권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개발협력의 세부사업들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모든 요소를 실현할 수 없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상황에서 북한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요소들에 대해 인도주의·인권적 측면에서 협력과 지원에 우선 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식수 문제, 에너지 문제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농촌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상하수도, 난방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북한 농촌 주민의 인도주의적·인권적 상황에 직접적 영향을 주면서 북한이 자체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의 기준에 따라 개도국 농촌개발협력 범주 및 세부사업들중에서 북한 농촌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전기, 상수도, 하수도, 오·폐기물처리, 화장실, 냉난방 등 6개)을 표-15와 같이 선별하였다(표에서 순서는 우선 순위와 무관). 여기서 연계된 인권은 OHCHR이 제시한 SDGs와 인권 연계성을 참고하여 세부사업에 적용하였다. 참고로 보건소·병원·약국 등 의료시설은 인도주의적·인권적 관점에서 중요하고 시급하나 북한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의약품·의료장비 지원 등 물품지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표-15. 인도·인권적 상황 개선을 위해 시급한 북한농촌개발협력 사업.

| 범주 | 세부사업 | 연계된 인권 |
|------------|------------|--|
| 마을 및 주거 환경 | ○ 전기 | ○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 건강권 ○ 모자 특별 보호 ○ 여성의 동등한 경제 생활의 권리 |
| | ○ 상수도 | ○ 안전한 식수·위생에 대한 권리 ○ 건강권, 생명권 ○ 농촌 여성의 물에 대한 동등한 접근 |
| | ○ 하수도 | ○ 안전한 위생에 대한 권리 ○ 건강권 ○ 농촌 여성의 위생에 대한 동등한 접근 |
| | ○ 오·폐기물 처리 | ○ 안전권, 청결권, 건강하고 지속적인 환경권 ○ 건강권, 생명권 |
| | ○ 화장실 | ○ 안전한 위생에 대한 권리 ○ 건강권 |
| | ○ 냉난방 | ○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 건강권, 생명권 ○ 모자 특별 보호 |

이렇게 선별된 사업들의 시급성을 알아보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2023.3.22.). 참고로 개인 연구 차원의 소규모 조사였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충분한 신뢰성, 객관성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북한 농촌개발에서 시급하고 선차적으로 필요

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파악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러한 연구결과가 충분한 객관성, 신뢰성, 현실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향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전수조사, 통계분석이 이루어지는 전문적인 연구로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대상은 북한 농촌개발 전문가를 포함한 탈북민 11명이며, 성별은 여자 63.6%(남자 36.4%), 연령대는 30~50대가 81.8%(60세 이상 18.2%), 지역은 북중 접경지역(함경북도·양강도)이 54.5%, 응답자의 63.6%가 농촌거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거주시기는 1990년대~2000년대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응답자가 6개 요소((전기, 상수도, 하수도, 오·폐기물처리, 화장실, 냉난방)에 대해 두가지 방법으로 시급성을 평가하게 하였다. 첫 번째 방법(이하 방법-1)은 요소 각각에 대해 독립적으로 시급성을 0(시급하지 않음)~5(매우 시급)의 점수로 표현하게 하였으며 두 번째 방법(방법-2)은 6개 사업 전체에 대해 시급한 것부터 순서를 정하게 하고 순서에 따라 5~0까지 점수를 부여하였다.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각 요소를 독립적으로 시급성을 평가하는 경우 모두 다 매우 시급하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각 요소간의 우선 순위를 구분하기 위해서였다. 표-16에 나와 있듯이 조사 결과에서, 각각 요소의 시급성을 독립적으로 평가는 ‘방법-1’에서는 전기가 가장 시급성이 높았으며(5.0), 상수도·화장실·냉난방(4.8), 하수도·오폐기물처리(4.7) 순이었으며, 시급성 정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것을 기준으로 보면 모든 요소들이 시급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반면에 6개 요소의 시급성 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점수를 배정한 ‘방법-2’에서는 시급성이 전기(4.9), 상수도(3.3), 하수도(2.5), 냉난방(2.4), 화장실(1.1), 오폐기물처리(0.8) 순서로 나타났으며 ‘방법-1’보다 시급성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두 방법간 차이로 시급한 순서와 시급성 정도에도 차이가 나지만 두 방법 모두에서 전기가 가장 시급하고 시급성의 차이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여기서 시급성의 수치에는 큰 의미가 없으며 두가지 방법간의 수치를 비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예를 들어 화장실은 방법-1에서 시급성이 4.8이었으나 방법 2에서 1.1로 두 방법간 차이가 3.7이지만 의미가 없으며 방법-2에서 시급성이 0에 가깝다고 해서 시급하

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본 보고서에서는 편의상 방법2를 기준으로 사업의 우선 순위를 부여하며, 실제 사업 추진시 모두 병행할 수 없는 환경에서 불가피하게 순서를 정해야 할 경우 이러한 우선 순위가 참고가 될 수 있다.

표-16. 인도주의·인권적으로 시급한 북한농촌개발협력 사업 관련 설문조사 결과.

| 범주 | 세부사업 | 시급성(0~5) | | 우선 순위 |
|------------|------------|----------|------|-------|
| | | 방법-1 | 방법-2 | |
| 마을 및 주거 환경 | ○ 전기 | 5.0 | 4.9 | 1 |
| | ○ 상수도 | 4.8 | 3.3 | 2 |
| | ○ 하수도 | 4.7 | 2.5 | 3 |
| | ○ 냉난방 | 4.8 | 2.4 | 4 |
| | ○ 화장실 | 4.8 | 1.1 | 5 |
| | ○ 오·폐기물 처리 | 4.7 | 0.8 | 6 |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전기는 북한 농촌 주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요소이다. 전기는 여러 가지 시설들에 없으면 안되는 전제 조건이다. 저니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나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국가적 인프라로서 북한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해결이 난망하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각 지역별로 또는 농촌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와 선진국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자립 마을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각 지역에 맞게 풍력, 태양광(열), 지열, 조력, 바이오가스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오스트리아의 에너지 자립 마을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향후 여건이 조성된다면 남북한은 물론 에너지 자립과 관련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오스트리아와도 마을간 자매결연, 지식공유 등 여러 가지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남북한과 동시 수교국이면서 남북한 대사관이 함께 있는 중립국 오스트리아는 다자협력의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북한 농촌에서 전기 다음으로 시급한 것이 상수도이다.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건강권과 생명권과 직결되는 상수도 문제 해결은 매우 시급하다. 가구 단위에서 보면, 전기는 부분적으로 공급되더라도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며 난방 에너지원으로서 전기가 부족할 경우 석탄·나무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반면 상수도가 없으면 우물(지하수)을 사용하면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오염된 지하수로는 살 수 없다. 지하수가 오염된 북한 농촌에서는 상수도 외에 안전한 식수를 확보할 방법이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절반 이상의 북한 농촌 주민들이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안전한 식수 공급은 북한 농촌개발협력에서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구 단위에서 보면 태양열(광) 장치 등으로 조명·난방을 일부 해결할 수 있으나 상수도는 일부라도 해결하기 어렵다. 상수도는 지역이나 마을 단위에서 해결해야 한다.

전기나 에너지원이 부족하여 대다수의 농촌 주민들이 우물물을 끓이지 않고 직접 마실 수 밖에 없고 비료 부족으로 농업용 퇴비 생산을 위해 가정의 분뇨를 사용해야 하는 화장실 구조를 감안할 때 식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수인성 질병 등 주민들, 특히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비료 부족 문제 해결 없이는 화장실과 오수를 모아 공동하수시설에서 처리하는 선진국형 수세식 화장실 및 하수처리시설 도입은 어려운 것이 북한 농촌의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화장실은 최대한 위생적으로 하되 퇴비 생산을 위한 분뇨를 취할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수인성 질병을 막기 위해 상수도와 하수도가 섞이지 않게 분리하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 분리하는 방법은 우물로는 불가능하며 마을이나 지역 단위 공동 상수도 시설 설치가 바람직하다.

설문조사에서 탈북민 응답자들은 기타 의견으로 상기 6개 사업외에 북한 주민의 인도주적·인권적으로 시급한 사업(요소 또는 시설)으로 비료, 교통수단, 철도·도로, 농기계·농기구,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언급하였다.

농촌개발이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전기·상하수·냉난방 및 부엌 등은 농촌 여성의 가사와 직접 관련 있으며, 농촌에서 남성과 농사일을 같이 하는 여성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요소들이 개선되면 가사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그 만큼 휴식 또는 자기 시간을 더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은 영유아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만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여성과 아동의 상황이 긴급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여성들은 사회 변화의 주체자이며 계속해서 여성의 역할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아동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언급했다(연합뉴스. 2023.3.24.). 북한 농촌은 취약한 지역이며 농촌 여성과 아동은 농촌 주민들중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농촌개발에서 여성과 아동의 인도적·인권적 상황 개선과 관련된 요소들을 더욱 확대·발굴하고 그 효과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인도주의 물품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인도주의·인권적으로 시급한 북한농촌개발협력 사업들은 인도주의 사업으로 분류하여 관련 물품·기술들의 대북제재 예외·면제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제재 면제 사유로 인도주의·인권적 성격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여타 북한농촌개발협력 사업들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 등 여건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3. 결론

본 보고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북한 농촌개발 문제를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식량난, 자연재해, 전염병 등 여러가지 복합요인으로 열악하며 개선이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기구들은 식량난·자연재해·전염병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인권적 상황은 열악하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도시와 농촌간 큰 격차로 인해 북한 농촌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농촌 아동과 여성의 저체중 비율과 산모사망율은 도시의 두배이며 저체중 아동 비율은 도시의 두배를 넘는다. 북한 농촌에서는 사실상 하수·오물처리가 되고 있지 않으며 농촌 주민 절반 이상이 오염된 식수를 마시며 살아가고 있으며 질병의 위협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북한 농촌 주민들의 건강권·생명권 등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농촌 주민들의 열악한 인도주의적·인권적 상황과 인권과 긴밀히 연계된 개발협력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도·인권적 관점에서 시급한 북한 농촌개발협력 추진방향과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북한 농촌 주민의 인도주의적·인권적 상황에 직접적 영향을 주면서 북한이 자체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의 기준에 따라 개도국 농촌개발협력 범주 및 세부사업들중에서 북한 농촌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6개 사업들(전기, 상수도, 하수도, 오·폐기물처리, 화장실, 냉난방)을 선별하였다. 탈북민 대상 소규모 설문조사를 통해 선별된 사업들의 시급성을 선정하였다. 조사 결과, ‘전기 > 상수도 > 하수도 > 냉난방 > 화장실 > 오폐기물처리’ 순으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인도적·인권적 접근과 연계한 북한 농촌개발협력의 추진방향과 우선 추진 사업들’은 대북정책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북한 농촌주민들 나아가 북한 전체 주민들의 인도주의·인권 상황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비전문가의 개인 연구인 만큼 전문성이나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혀 두며, 연구결과의 신뢰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통계청. 북한통계포털. <https://kosis.kr/bukhan> (접속일: 2023.2.9.)

ACAPS. DPRK Overview. <https://www.acaps.org/country/dprk/crisis>
(접속일: 2023.2.7.)

UNICEF. 2021. Joint Child Manutrition Estimates-levels and trends-
2021 edition. <https://data.unicef.org>.

김다울. 2022. Assessing regional economy in North Korea using
nighttime light, Asia and the Global Economy 2(2022), ELSEVIER.

FAO. 2015. The State of Food and Agriculture: Social Protection
and Agriculture: breaking the cycle of rural poverty.
<https://data.unicef.org/documents>

UNHABITAT. 2020. World Cities Report 2020.
<https://unhabitat.org/sites>.

VOA. 2020.11.11. 유엔 “북한인구 62% 도시 거주..도농 격차는 여전히
심각”.

UNICEF. 2020. State of World’s Drinking Water.

UNWATER. <https://www.sdg6data.org> (접속일: 2023.3.1.)

UNESCO. 2020. 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2020: Water and

Climate Change.

VOA. 2020.3.24. 세계 물의 날... “북한, 식수 오염으로 수인성 감염병 심각”.

연합뉴스. 2019.3.2.1. 이호식 교수 “북한 물 오염 심각...상하수도 인프라 건설 필요”.

BBC. 2019.6.26. 북한 주민 1/3은 안전한 식수 마시지 못해, 국제기구 연구 보고서.

연합뉴스 2022.7.22. “수인성 전염병 막아라”, 북한, 상하수도 인프라 보강 나서.

UNICEF. 2018.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KBS. 2023.2.4. [클로즈업 북한] 목표는 좋은데...지방 발전, 어떻게?

김혁. 2022. 북한의 농촌개발과 전망. 내부자료 및 자문.

여주시. 새마을운동과 농어촌 개발의 명암. (<https://www.yeaju.go.kr>)
(접속일: 2023.1.16.)

새마을운동중앙회(KSUC). 새마을운동아카이브.
(<https://www.saemaul.or.kr>) (접속일: 2023.1.16.)

경상북도, 2023.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전개. (<https://www.gb.go.kr>)
(접속일: 2023.1.16.)

조한덕. 2005. 개도국 농촌개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우리나라의 개도국 농촌개발 추진방향 및 전략에 대한 고찰, 국제개발협력.

왕능욱. 2011. 새마을운동과 부녀회활동 속에 여성참여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논문.

장준철. 2012. 새마을운동에서 여성의 역할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석사논문.

이현근. 2017. 오스트리아의 농업 및 농업정책. 농촌경제연구원.

외교부. 2021. 오스트리아 개황.

Pocacito. “Model Güssing”: A vision of energy self-sufficiency. <https://www.pocacito.eu/>(접속일 2023.4.4.)

Coolheating. Güssing: A Self-Sufficient Town in Austria. <https://www.coolheating.eu/>(접속일 2023.4.4.)

GET(Güssing Energy Technologies). 주소: Wr. Str. 49, 7540 Güssing, Austria. get.ac.at/(접속일 2023.5.15.)

UN.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A/RES/70/1).

E. Lichtfouse et al. 2009. Agronomy for Sustainable Agriculture: A Review. Sustainable Agriculture. Springer.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2016. 알기쉬운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U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https://www.un.org/>(접속일 2023.3.13.)

UN. 세계인권선언(한글 번역본). <https://www.ohchr.org/>(접속일 2023.2.13.)

이성훈. 201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인권기반 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 2017-4호.

DIHR(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http://sdg.humanrights.dk>. (접속일 2023.1.30.)

URG(Universal Rights Group). 2017. Human Rights and the SDGs: Pursuing Synergies.

OHCH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lated human rights.
<https://www.ohchr.org/>(접속일 2023.1.30.)

NKSDG. SDGs와 인권간의 연계. <https://nksdg.org/>(접속일 2023.1.30.)

문경연. 2019. 북한개발협력과 SDGs: 북한·UN 전략계획의 의미, 수은 북한경제 2019년 여름호(통권 제61호).

DPRK. 2021.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 (접속일: 2023.2.8.)

최규빈. 2022.12. 북한의 SDGs 수용 현황과 특징.
<https://kosis.kr/bukhan/nkAnals> (접속일:2023.2.8.)

통일부. 2020.5.27. 보도자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UNESCAP의 「지속가능발전 역량지원사업」 기금 지원(안) 의결.

허장, 정승은, 최세균. 2013. 개도국 농촌개발을 위한 협력모델과 전략수립 방안, 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김경량, 김경철. 2015.11. SDGs 채택에 따른 농촌개발분야 국제개발협력의 과제. 국제개발협력 2015년 4호.

연합뉴스. 2023.3.24. [일문일답]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北 변화 주체로 여성 주목할 것".

World Bank. <https://data.worldbank.org> (접속일: 2023.3.28.)

부록

부록-표-1. 인도주의·인권적으로 시급한 북한농촌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방법-1).

| | 전기 | 상수도 | 냉난방 | 하수도 | 오폐기물처리 | 화장실 |
|-----------|------------|------------|------------|------------|------------|------------|
| 응답자1 | 5 | 5 | 5 | 5 | 5 | 5 |
| 응답자2 | 5 | 5 | 5 | 5 | 5 | 5 |
| 응답자3 | 5 | 5 | 5 | 5 | 5 | 5 |
| 응답자4 | 5 | 5 | 5 | 5 | 5 | 5 |
| 응답자5 | 5 | 5 | 5 | 5 | 5 | 5 |
| 응답자6 | 5 | 5 | 5 | 5 | 5 | 5 |
| 응답자7 | 5 | 4 | 5 | 5 | 5 | 5 |
| 응답자8 | 5 | 4 | 3 | 2 | 2 | 3 |
| 응답자9 | 5 | 5 | 5 | 5 | 5 | 5 |
| 응답자10 | 5 | 5 | 5 | 5 | 5 | 5 |
| 응답자11 | 5 | 5 | 5 | 5 | 5 | 5 |
| 평균 | 5.0 | 4.8 | 4.8 | 4.7 | 4.7 | 4.8 |

부록-표-2. 인도주의·인권적으로 시급한 북한농촌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방법-2).

| | 전기 | 상수도 | 냉난방 | 하수도 | 오폐기물처리 | 화장실 |
|--------------|------------|------------|------------|------------|------------|------------|
| 응답자1 | 5 | 4 | 0 | 2 | 1 | 3 |
| 응답자2 | 5 | 4 | 3 | 2 | 0 | 1 |
| 응답자3 | 5 | 4 | 3 | 0 | 1 | 2 |
| 응답자4 | 5 | 3 | 2 | 4 | 0 | 1 |
| 응답자5 | 5 | 3 | 4 | 2 | 1 | 0 |
| 응답자6 | 5 | 3 | 2 | 4 | 1 | 0 |
| 응답자7 | 5 | 2 | 4 | 1 | 3 | 0 |
| 응답자8 | 5 | 4 | 2 | 1 | 0 | 3 |
| 응답자9 | 5 | 3 | 2 | 4 | 1 | 0 |
| 응답자10 | 4 | 3 | 2 | 5 | 0 | 1 |
| 평균 | 4.9 | 3.3 | 2.4 | 2.5 | 0.8 | 1.1 |
| 우선 순위 | 1 | 2 | 4 | 3 | 6 | 5 |